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
- 유연근무·휴가제도는 이렇게 도입합니다 (고용노동부)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감독원)
-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2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4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 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담·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중 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고두환·고영일·권창현·김경수·김대현·김동욱·김봉수·김영룡·김옥철·김윤정·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태준·김한솔·김현단·박규태·박병준·박윤중·박정렬·박형동·배한성·배익권·서병욱·서혜빈(수습)·손세정(품질관리)·송형곤·양승민·오진탁·유진우·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재권·이종량·이희건·임정훈·장용석·제갈원구·조민기·조영우·조원진·진수미·최영진·표정엽·한상표·허정식·홍상연·홍재권·홍희빈·황창연

서초(분실)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박지은·선지우·이승환·이현섭·이혜리·정호신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이남재·정 현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윤재운·이동계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김수범·강용희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박지훈·이상태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최정화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이형래·홍영표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대건·이수영·장시연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이상훈·정대환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오유준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이원재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김성우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 근·고경환
울산지점	052-263-7006 방수혁·오승혁·장효철	중기(마포)	02-312-2255 이악재·이준상·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5.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7.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8.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M&A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기타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1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2(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중 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액 신고, 교육세(금융·보 험업분) 제3기분, 개별소 비세(유류 등), 교통세 (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 납부, 일용근로소득 지 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 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 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 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6(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거주자 소득세율 비교 2
- ✓ 외부회계감사기간 중 독립성 침해되어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유형 3
- ✓ 실제거래시세 5억 내의 소규모 아파트 부담부증여 관련 총세금비교 4
- ✓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면제)의 열거범위 5

이달의 특집

- ✓ 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

세무정보

- ✓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 70

노무정보

- ✓ 유연근무·휴가제도는 이렇게 도입합니다 (고용노동부) 99

경영정보

-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113
- ✓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업
무협약(MOU) 체결 (금융감독원)
- ✓ 2024년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117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11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거주자 소득세율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4/10/30일자 통권 1699호

개념, 구분	국내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판단	국내 주소, 연단위 국내거소 183일 이상	국내 주소 없거나, 국내거소 183일 미만자
납세의무범위	국내 + 해외의 전 소득 합산과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조세조약에 따름)
이자소득	일반 금융이자자의 15.4% + 종합과세	일반이자소득의 22% 분리과세
국가등채권	일반이자소득의 15.4% + 종합과세	채권이자소득의 15.4% 분리과세
비영업대금	비영업이자소득 × 27.5%, 종합과세	일반이자소득의 22%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의 15.4% + 종합과세	일반배당소득의 22% 분리과세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지급액의 3.3% + 종합과세합산	인적용역소득의 22% 분리과세
사용료소득	법정경비 60% 후 순소득 $40\% \times 20\% \times 1.1 = 8.8\%$	사용료 지급액의 22% 분리과세
특허권소득	법정경비 60% 후 순소득 $40\% \times 20\% \times 1.1 = 8.8\%$	특허보상액의 16.5% 분리과세
부동산양도소득	양도차익×기본세율 적용	지급액의 $11\% \leq$ 양도차익의 22%
유가증권양도	금융투자수익×22%(과세유예중)	지급액의 $11\% \leq$ 양도차익의 22%
근로소득	근로소득순액×기본세율 적용	인적용역소득간주×22% 분리과세

◎ 외부회계감사기간 중 독립성 침해되어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유형

- 안세재경저널 2024/11/6일자 통권 1700호

개념구분	독립성위배로 불가능한 구체적 업무내용
회계·경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세무조정은 가능)
재무제표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주식사항 작성 등(피감회사의 경영진 책임업무임)
IFRS 변환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사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감사기업에 모기업 위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등	기업의 내부감사업무대행, 내부감사직 취임 등
재무정보 자문	재무정보 체제의 설계,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매도매수자문	자본·자산·기타 회사권리를 매도·매수하는 자문업무 등
인사·조직 등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자문업무, 인력채용 대행업무
보험충당부채	재무제표에 계상반영되는 보험충당부채 산정, 보험계리업무
소송자문	민사·형사 소송에 관한 자문업무, 소송안내자문 등
재무자문	자금조달, 차입, 투자알선자문, 중개업무 등
경영의사 결정	중요자산 처분양도, 지배인 선임 등, 경영의사 결정 등 임원에 준하는 직위역할업무

◎ 실제거래시세 5억 내외 소규모 아파트 부담부증여 관련 총세금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4/11/13일자 통권 1701호

개념구분	전액증여	전세금 부담부증여	아파트 양도후 전액증여
거래방법 개념	시세 5.6억 아파트 1채 전부증여	아파트 시세의 50%인 2.8억원의 전세금 부담증여	아파트 먼저 팔고난 잔액증여
증여당시 시가 (국토교통부 거래가)	5.6억원	5.6억원 (전세금 50%인 2.8억)	5.6억원
분양취득원가	약 1.6억원(총액)	부담부증여 양도원가 0.8억원	1.6억원
전세금 해당액	없음	2.8억원	관련 없음
㉓ 취득등록세	$5.6\text{억} \times 3.5\% = 1960\text{만원}$	$2.8\text{억} \times 3.5\% + 2.8\text{억원} \times 1\% = 1,260\text{만원}$	해당없음(취득자 비용)
㉔ 양도세 계산	없음	양도가(전세금) 2.8억 - 취득원가 환산액 0.8억 = 2억원의 일반 양도세 5,606만원	양도가 5.6억 - 취득원가 1.6억 = 4억원의 양도세 : 1억 3406만원
㉕ 양도세분 지방세	없음	$5606\text{만원} \times 10\% = 560\text{만원}$	$1\text{억}3406 \times 10\% = 1340\text{만원}$
㉖ 증여세 계산	$(1\text{억} \times 10\% + 4\text{억} \times 20\% + 0.6\text{억} \times 30\%) \times 97\% = 1\text{억 } 476\text{만원}$	순증여액 : $5.6\text{억} - 2.8\text{억원} = 2.8\text{억원}$ $(1\text{억} \times 10\% + 1.8\text{억} \times 20\%) \times 97\% = 4,462\text{만원}$	양도세 약 1.5억원 납부후 증여 $5.6\text{억} - 1.5\text{억} = 4.1\text{억}$ 증여세 $(1\text{억} \times 10\% + 3.1\text{억} \times 20\%) \times 97\% = 6984\text{만원}$
총세금 합계 (㉓+㉔+㉕+㉖)	124,360,000원 (부모 대납시 약 1.68억원 해당)	118,880,000원	217,300,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면제)의 열거범위

- 안세재경저널 2024/11/20일자 통권 1702호

개념구분	국내생산, 제조, 가공, 판매 면세되는 열거범위	해외수입품(부가세 면세조건)
미가공식료품	식용농산·축산·수산·임산 등	식용 농·축·수·임산물 등(좌동)
비식용 1차산물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면세안됨(과세)
수도, 연탄, 무연탄	부가세 면제	열거안됨(과세)
여성위생용품	부가세 면제	열거안됨(과세)
도서, 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방송 등, 전자출판물 포함	도서, 신문, 잡지, 서적, 전자출판물 포함
학술, 교육 관련	교육용역 포괄면세	과학, 교육, 문화용 수입재화
종교, 공익, 기증 등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공급품	종교, 자선, 구호단체 기증 목적 수입
국가, 지자체 기증	국가, 지자체 등 공급재화·용역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기증목적 수입
이사, 이민, 상속	규정없음(일반과세 조건)	관세 면제, 간이세율 적용 재화
수출 후 재수입	해당안됨	관세가 감면되는 조건임
재수출조건 임시	해당안됨	수출 후 임시수입재화로 관세감면 조건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와 일반양도세율 + 10% 추가세율 적용

- 안세재경저널 2024/11/27일자 통권 1703호

개념구분	업무용 양도 (일반종합소득세율)	비업무용 분류 (일반세율 + 10% 가산율)
과세방법	다단계누진세율(6%~45%)	다단계누진세율 + 10% 세율 추가함
일반토지	지방세 과세·면제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사업관련 적격기준범위 토지	각종 사업 용도적격 기준범위 초과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주거용 토지	주택부수면적(수도권 3배, 녹색지역 5배, 수도권 밖 10배 토지)	별장(휴양, 피서, 위탁용) 부속토지
일반농지	농지소유지 거주, 자기경작농지, 재촌직접경작	농지소유지 비거주나 자기경작 아닌 경우
도시농지 등	도시지역 편입된지 3년 안된 농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농지
일반임야	임야소재지·연접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주민등록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직선거리 기준 30km밖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특별임야	임업후계자의 종자·묘목용, 자연휴양림 운영자, 수목원운영자, 상속 3년내 임야, 종중임야 등	왼쪽 열거된 경우가 아닌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경영자 토지, 축산기준면적내 토지, 상속받은 목장으로 3년내 용지	축산용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내 토지
특별용도	운동장, 경기장, 주차장 부설토지,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용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



이달의

특 집

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I. 증자의 개요

1. 증자의 의의

- 증자(신주발행)란 회사설립 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상장회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여야 함.
- 증자는 주식발행으로 인해 실질자산과 자본금이 모두 증가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의 증가없이 자본금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분됨

[신주발행의 구분]

구분		내용
통상의 신주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으로서,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며 순자산도 증가함 • 액면주식 발행회사는 발행주식수×액면금액만큼 자본금 증가 • 무액면주식 발행회사는 이사회가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에 계상할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
특수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또는 주식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주식배당에 의해 자본금은 증가하나, 준비금 또는 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순자산에 변화 없음

특수한 신주발행	전환주식의 전환	•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주식의 수가 신주보다 많으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전환주식의 수가 신주보다 적으면 자본금이 감소하나 순자산에 변화 없음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되며, 따라서 순자산은 증가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로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과 순자산이 증가함
	주식병합	• 액면주식의 병합 시 자본금이 감소하며 신주가 발행됨
	주식분할	•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나 회사의 자산과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음
	회생절차상의 신주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참조 : 임재연, 「회사법 I (개정8판)」, 박영사, 2022.4., 614-616면

2. 증자대상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상법 제329조 제4항)

1) 액면주식

- 액면주식이란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함. 회사가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액면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0조).
 -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때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액면 미달발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가능함
- 액면주식은 신주발행시 액면총액(발행주식총수× 액면가)만큼 자본금으로 계상되고(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됨

2) 무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 액면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없음
-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됨(상법 제451조 제2항)

(2) 보통주식·종류주식

-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주식으로 종류주식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의미함
-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상환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 제1항)

[종류주식의 유형]

-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③ 상환주식
- ④ 전환주식
- ⑤ 위의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

- 상법은 종류주식의 유형별로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관으로 정한 후 발행하여야 함

[종류주식 유형별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344조의2~제346조

주식의 종류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재산의 종류 •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상환 주식	회사 상환주식	•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상환할 주식의 수
	주주 상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상환가액 / 상환청구기간 / 상환방법

전환 주식	회사 전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유 / 전환조건 / 전환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주주 전환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조건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작성 방법 및 예시는 본회 발간자료 '2022 상장회사 정관작성실무' 참조

3. 증자의 형태

(1) 유상증자

- 유상증자는 신주인수인이 주식인수의 대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 이로 인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며,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 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만큼 자본금도 증가함.

1) 신주배정 대상에 따른 분류

-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배정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방식으로 구분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구 분	신주배정 대상	근거법령
① 주주배정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	상법 §418①, 자본시장법 §165의6①1
② 제3자배정	특정인에게 배정	상법 §418②, 자본시장법 §165의6①2
③ 공모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기회 부여	자본시장법 §165의6①3

- 주주배정방식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원칙적으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으며(상법 제418조 제1항), 이에 따라 주주의 보유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제3자배정방식 :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418조 제2항), 이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공모방식 :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① (주주우선공모)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거나, ② (일반공모) 주주의 우선청약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동등하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주주우선공모는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청약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주주배정과 구분).
- 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정관에 공모방식의 주식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 공모방식으로 발행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상법 규정(제418조제2항단서)이 적용되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단서)

2) 발행가액에 따른 분류

가. 시가발행

- 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신주배정대상에 따라 발행가액 규제를 적용받음(발행공시규정 5-18조)

구분	주주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		공모방식
	실권주 미발행	실권주 발행	일반	보호예수 하는 경우	
발행가액	발행가액 자율결정	기준주가에서 4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에서 1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에서 3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총거래금액/ 총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주가 (총거래금액/ 총거래량)	아래의 ①, ② 중 낮은 가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총거래금액/ 총거래량)
기산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경우 시가발행시 주금납입액 중 액면가는 자본금으로, 액면가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 주식 1,000주(액면금액 5,000원)를 주당 8,000원에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 전>
(차) 별단예금* 8,000,000원 (대) 신주청약증거금 8,000,000원
* 주식발행 전에는 별단예금으로 기재하고 주식발행 후 일반예금으로 전환

<주식발행 후>

(차) 신주청약증거금	8,000,000원	(대) 자본금	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원

나. 액면미달발행

-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액면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액면미달발행)할 수도 있음
- 액면미달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상법 제417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가능(자본시장법 제165조의8 제1항)
-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액면미달의 발행을 한다는 내용과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며(상법 제417조 제2항), 상장회사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8 제2항)

[액면미달발행시 최저발행가액 산정방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8 및 동시행령 제176조의10

- ①~③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의 70%이상으로 발행

- ①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③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이사회 결의일 전일 최종시세가액

- 액면미달발행시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68조의8 제1항),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 차금의 상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함.
-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8 제3항).

3)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직접발행 : 회사가 인수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상증자 사무처리를 하는 방식
- 간접발행 : 사무처리 부담, 증권발행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으로

구분됨

- 인수인은 증권의 공모(모집·매출)·사모를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①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계약 체결(총액인수), ②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취득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잔액인수)을 하고 이에 따라 모집 등 업무하는 자를 말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및 제12항)
-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증권의 공모(모집·매출)·사모를 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모(모집·매출)·사모를 분담하는 자로 청약사무취급기관 등이 해당됨(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개 념	인수인이 발행된 증권의 전부(인수인이 다수인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인수하여 공모하는 방식	증권발행시 취득되지 않은 잔여분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방식	모집 및 매출 주선업무만 수행하며 취득되지 않은 증권의 인수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
비 용	주관회사가 발행주식에 대한 위험을 부담(실권주 인수)함에 따라 모집주선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음		실권주 인수위험이 없으므로 인수방식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

- 금전납입 :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의 납입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상법 제421조 제1항)
- 상계 : ①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회사가 신주인수인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동의한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음(상법 제421조 제2항)
 - 예컨대 발행회사의 신주 2,000주(발행가액 5,000원)를 인수한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 대여를 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신주인수대금 1,000만원을 금전 납입 대신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주금납입채무 상계가 있는 경우 자본금 변경등기 첨부서류]

-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 중 일부만 상계한 경우 위의 서류에 추가하여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4.24.)]

- **현물출자** : 신주인수 대가를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하며(상법 제416조제4호)검사인 조사(공인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상법 제422조)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은 양도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따라서 동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가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 등 재산적가치가 불분명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재산의 조사를 위하여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조사가 면제됨(상법 제422조)

[현물출자 목적재산의 조사 면제] 상법 제422조 제2항, 동시행령 제14조

-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현물출자 목적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관련 물건적·채권적 제한 또는 부담이 설정된 경우 적용제외)

- (1)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간의 거래소 평균 증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거래소 평균 증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 거래소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 (2) 결의일 직전 거래일 거래소 증가

-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현물출자시 목적재산 가액이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자산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또는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 자산취득 관련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제출하여야 함

[자산 취득 관련 공시사항] 자본시장법 §161 및 동시행령 §171②, 공시규정 §7①2나(2)(3)

<유형자산>

- (FSS)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KRX)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주요경영사항 공시)

<타법인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 (FSS)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타법인주식 또는 주권관련사채권 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KRX)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2.5%)이상의 타법인주식또는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주요경영사항 공시)

<기타 자산>

- (FSS)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자산의 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 상법상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현물출자자 성명, 목적재산 종류등)을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상법 제416조 제4호)주주의 자에게 현물출자 방식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상법 제418조 제2항)이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주주의 자에게 배정시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경영상 목적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서울남부지법 2010.11.26. 선고 2010가합3538 판결)

(2) 무상증자

-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는 신주인수인의 별도의 납입(현금 또는 현물)없이 회사가 적립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증자 방식을 말함
 - 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적립의무가 있는 법정준비금(상법 제458조, 제459조)과 상법 이외의 특별법, 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으며,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와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로 구분됨
 -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적립에 의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며, 자본준비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을 재원으로 함
- 무상증자는 준비금(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금액을 차감하여 동액을 자본금 계정에 가산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므로 회사의 자산은 증가하지 않고 자본금만 증가함

[무상증자 회계처리]

- 재평가적립금 30,000,000원, 이익준비금 7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주 20,000주(액면 5,000원)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차) 재평가적립금	30,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00원
이익준비금	70,000,000원		

-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만큼 신주가 발행되며 이를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상법 제461조 제2항)하고, 단주 발생시 단주를 매각하여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상법 제461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함(상법 제461조 제1항)

-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신주배정일(상법제416조제3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자본금 전입의 효력(신주발행의효력)이 발생(상법제416조제4항)

- 무상증자는 대차대조표상 계정이동만 있을 뿐 실질적인 주식발행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약의 권유 등 행위도 필요치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 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또는 상장예정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를 배정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의7 제1항, 동시행령 제176의9 제2항)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적용제외]

-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합산한 금액이 회사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9③1)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기발행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자본시장법 §165의7②)
[우리사주조합원 소유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으로 산정(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9④)]

- 주주배정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청약일 2주간 전 통지(상법 제419조)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3항)
- 자본시장법 개정(2013.5.28.자) 이전에는 조합원 실권분을 주주에게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배정통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발행가액 확정 전에 조합원 우선청약 후 실권분을 반영하여 주주배정 비율을 정하고 주주청약을 받았으나, 현재는 조합원과 주주의 동시 청약이 가능함

5. 실권주의 처리

-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청약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실권주)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본문)

- 주주배정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및 기존주주의 미청약분,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주주우선 청약 및 일반청약 완료 후 미청약분, 일반공모의 경우 일반청약 후 미청약분 등이 실권주에 해당함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권주 발행이 허용(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단서)되므로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제3자배정의 경우 회사와 제3자간의 신주인수계약이므로 제3자가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은실권주 발행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발행할 수 없음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

- (공통요건) 금융위 고시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 (선택요건) 이하의 ①~④ 중 선택 가능
 - 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② 주주배정시 배정주식 수의 20%까지 초과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주주배정방식의 경우에만 적용가능)
 - ③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 미만의 신주를 발행(소액공모)하는 경우
 - ④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 금융위 고시가격 :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발행공시규정 §5-15의2①)

주주배정방식	40% 할인율
제3자 배정방식	10% 할인율
공모방식(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30% 할인율

II. 유상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1. 공모의 의의

(1) 청약의 권유

- (정의) 청약의 권유란 증권을 취득하도록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함
 - 발행인 명칭, 발행 또는 매도예정금액, 일반적인 조건 등을 광고 등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히 알리는 경우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ii 단서, 발행공시규정 제1-3조).

[청약의 권유 제외요건] 발행공시규정 제1-3조

- 인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을 것
- 증권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예비, 간이 포함)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2) 모집 또는 매출

-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거래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이며, 해당 증권거래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 '공모',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모'로 구분(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 공모는 모집·매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증자방식 중 공모방식(일반공모 등)에 한정되는 의미가 아님
- 모집은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 매출은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
-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정기준 : 청약권유일 이전 6개월 내 권유하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실제 청약자가 50인 미만이어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매출에 해당함
 - 같은 종류의 증권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구분(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라 판단하며, 주권의 경우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종류주식 등)은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지 아니함
 - ※ '채무증권'의 포괄적인 정의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개별증권 별로 같은 증권으로 간주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를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의 6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개별 증권을 열거
- 자본시장법상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증권의 구분에 따라 청약권유대상 산정시 '같은 종류의 증권'을 판단
- 지분증권의 경우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각을 '같은 증권'으로 간주함(예외적으로 주권에 한하여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인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다른 증권으로 판단)

- 발행회사의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은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청약권유의 대상자 산정시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1인으로, 법인격 없는 조합, 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

[연고자 및 전문가의 범위 :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발행공시규정 제2-1조

- 연고자 : 최대주주, 5% 이상 소유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와 그 임원, 비상장회사인 경우 (모집, 매출 실적있는 법인 제외) 그 주주 등
- 전문가 :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인에 회계,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3) 간주모집

- 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매기준)에는 모집으로 간주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사모발행이더라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으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주식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코넥스시장 제외)에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됨(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 전매기준에 해당되는 사모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모집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항),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증권신고서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주식의 전매제한조치]

- ① 주식발행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②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증권종류별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발행공시규정 §2-2, §2-2의2)

구 분	전매기준	전매제한조치*	비 고
지분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 시장 (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주권, 출자 증권 등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기업어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거래단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는 경우(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 기준) 	예)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기업어음	<p>(아래 중 어느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금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행담보장치를 마련한 경우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와 지분증권 외의 증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 병행 	예) CB, BW 등에 부여된 권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증권의 발행 당시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취득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p>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증권의 권면,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취득자로부터 그러한 발행조건을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강구한 후 발행하는 경우</p> <p>나. 발행 후 지체 없이 발행자의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인출하지 못하며 거주자에게 해당 증권 등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p> <p>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 사</p>	

		<p>채권·교환사채권이 아닌 사채권으로서 규정 §2-2② 제4호(나 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취득(발행 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규정 §2-2의2②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라. 기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되는 경우</p>	
--	--	---	--

* 공통사항(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규정 §2-2② 제1호)

- ①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②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2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예탁된 증권의 일시적 인출 허용 사유(규정 §2-2③)

예탁결제원 및 수탁기관은 제2항제1호 전단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수탁기관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6.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칙 미반영]

* 발행인이 질권 설정을 위하여 예탁된 증권의 일시 인출을 우리 원에 신청하는 경우 우리 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출을 승인하되 전매제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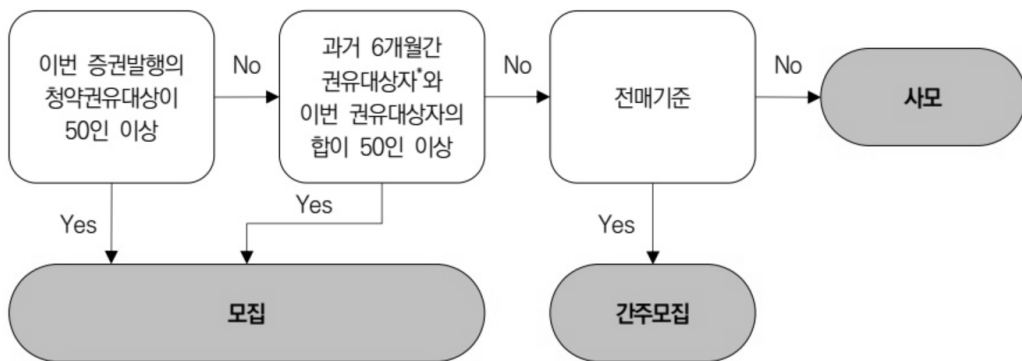
- (i) 인출한 주식은 질권 설정 후 즉시 재예탁하고 그 증빙을 우리 원에 제출할 것
- (ii) 해당 인출주식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므로, 질권 설정 외에는 소유권 등 일체의 조건을 달지 말 것
- (iii) 채권자에 대해 재보호예수확약서, 질권설정 목적 외의 행위금지 확약서, 의무보호예수계약 만료일 이전 질권 행사 금지확약서를 받아서 예탁결제원에 제출할 것

2. 증권신고서의 제출

(1)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제출의무자

- (제출대상)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공모(모집·매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20조)

● 공모 해당 여부의 판단



*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 <사례 1> 아래 甲의 경우 매 건에 포함되지만, 과거 6개월간 권유대상자를 합산하여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인으로 계산

증권 발행일	2024. 1. 1.	2024. 2. 1.	2024. 3. 1.	2024. 4. 1.
청약의 권유 대상자	甲+15인	甲+15인	甲+15인	甲+15인
개별건의 공모여부 판단 시	16인	16인	16인	6인
합산하여 공모여부 판단 시	16인	31인	46인	51인

● 10억원 산정방법

- 해당 증권발행(또는 매도)만으로 공모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모집(매출)예정금액 + 증권종류 불문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매출)금액의 합계액

- 해당증권발행(또는 매도)의 청약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으로 모집(매출)에 해당되지 않으나, 과거 6개월간 같은 종류의 증권 청약권유 대상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약권유 예정금액 +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 증권에 대한 과거 6개월간 모집(매출)에 의하지 않은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

* 청약권유금액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구자 등)에게 권유한 금액도 합산

- <사례 2> 비상장법인의 주식발행의 경우(기준에 공모실적이 없음을 가정)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 권유자수	신고서 제출여부
①	2021. 07. 03.	7억원	7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②	2022. 01. 27	9억원	60명	신고서 제출대상
③	2022. 07. 02	8억원	40명	신고서 제출대상
④	2022. 08. 10	5억원	3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 ① 공모에 해당되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소액공모 공시대상
- ② 공모에 해당하며,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금액(16억원 = 7억원 + 9억원)이 10억원 이상
이므로 신고서 제출 대상
- ③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40명)는 50명 이하이지만, 과거 공모실
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과거 1년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 금액이 15억원(=8억원+7억
원)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
- ④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30명)는 50명 이하이지만, 과거 공모실
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고, 과거 1년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 금액이 5억원이므로 소액공모
공시대상

- (제출대상 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증권은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
권이며, 합병,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영업·자산양수도 등의 경
우에도 증권발행이 수반되고 모집(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
- (제출의무자) 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발행인(회사)이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① 자본시장법상 제출면제 증권(자본시장법 §118, 동법시행령 §119)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한국은행, 산업·기업·수출입·농
협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토지주택·도로·주택금융·전력·석유·가스·수자원·농어촌·공항·관광·철도공
사 등)이 발행한 채권
- ②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자본시장법 §119⑥, 동법시행령 §124의2, 발행공시규정 §2-4의2)
 - 발행인과 매출대상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때에는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제175조에 따
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
실이 있을 것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新회사가 주식·사채 발행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적용 배제

(2)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제출시기

- 증권신고서는 ①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과 ②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발행증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기재내용의 증빙 및 공모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1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발행공시규정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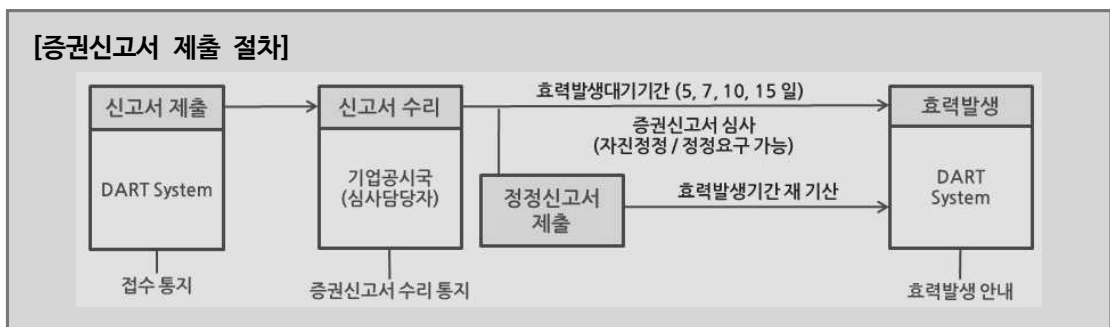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에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자금의 사용목적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개요 • 재무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사업의 내용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주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증권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관련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승인서 사본 • 인수계약서 사본(인수계약 체결시) •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증권시장 신규상장시) •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신고서 효력발생 전 청약권유시) •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 <p>[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분기감사보고서/분기검토보고서, 모집주선계약서 사본(계약체결시), 회계감사인의 확인서(증권시장 상장시) 등]</p>

- 발행인은 주식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의 권유가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19조)

(3)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1)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 모집(매출)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회사)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상 불비가 없고 증권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됨



2) 정정신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2조)
 - 정정신고서는 ① 자본시장법상 정정신고서 의무 제출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금융위(감독원)의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③ 발행회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금융위(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 유상증자 관련 공모일정 중 반기보고서 제출시기 도래
 - ⇒ 유상증자 주요일정에 반기보고서 제출일정 및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정 추가 및 동 정정신고서 제출 예정사실 및 투자자 주의문구 기재요구

증권신고서 제출 후 청약일 개시 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22③, 영 §130②3).

- 대표주간회사와 실권주 인수계약 체결 시 부분잔액인수방식(모집금액의 ○%의 범위 내)으로 기재
 - ⇒ 현행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법 §165의10, 165의6) 실권주 인수방식 처리는 인수인이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만 가능하므로 실권주 처리방식을 이사회에서 재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른 실권주 처리방식 및 향후 일정을 자세히 기재요구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필수적 정정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 발행공시규정 제2-13조

증권발행 관련 사항 변경	주요사건 발생·기재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등 발행조건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기 초자산 발행증권의 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 른 투자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분·반기보고서확정 사업목적의 변경 영업양수도, 합병계약 체결 경영,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제기 어음수표 부도,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 해산사유 발생 증권신고서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중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발행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 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

-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효력발생기간을 재계산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5항)
 - 모집·매출가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일이 수리일로부터 3일로 단축됨(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 다만,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 발행가액 등 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른 확정된 가액으로의 신고서 기재내용 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발행공시규정제2-3조제2항및제3항)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 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 본시장법 제120조)
- 효력발생기간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증권의 성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됨(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효력발생기간	10영업일	7영업일

4) 증권신고서의 철회

-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0조 제4항)
 - 금융위(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

(4)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 해당 증권발행이 모집·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매출(증권 종류 불문)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감독원)에 제출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 3일전(영업일 아님)까지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을 권유한 문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소액공모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가 아닌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사용하므로 투자설명서 공시의무도 면제되며, 소액공모 종료시 지체없이 소액공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2-17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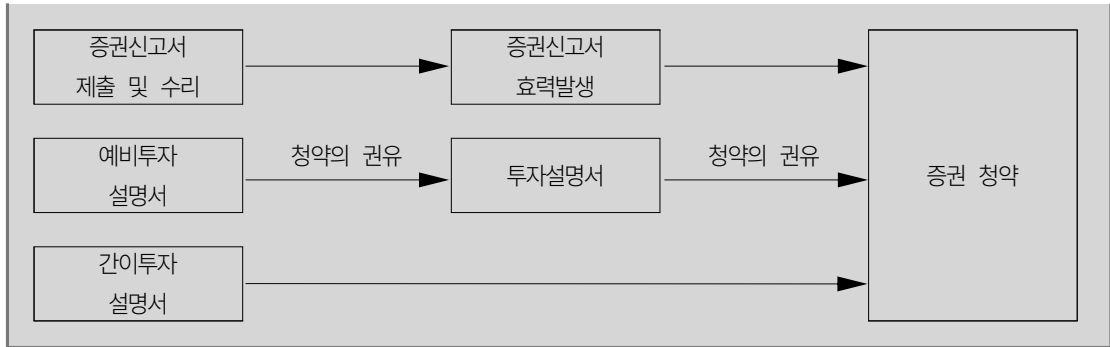
3. 투자설명서의 제출·교부

(1) 투자설명서의 의의 및 종류

- 투자설명서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는 청약권유문서이며 활용시기에 따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로 구분됨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증권의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투자설명서의 종류] (자본시장법 제4조)

- 예비투자설명서 : 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청약권유 문서(자본시장법 제124조제2항제2호)
- 투자설명서 : 신고서 효력발생 후 모집·매출 조건이 확정된 경우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하는 청약권유문서(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1호)
- 간이투자설명서 : 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생략하거나 중요한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또는 표시한청약권유문서(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3호)



(2)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발행회사, 인수인 등이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발행인의 연고자,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한 자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교부가 면제됨(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32조)
-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부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요건]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에 대한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것
-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4. 증권신고서 등 실효성 확보장치

(1) 허위·부실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첨부서류 포함) 및 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

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여 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

- 증권신고서 신고인,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법인 설립전 신고시 발기인)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업무집행지시자)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자격을 가진 자(소속단체 포함)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경우 매출신고 당시 매출인

- 예측정보가 아래에 따라 기재·표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제125조 제2항).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최초로 주권을 모집·매출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제125조 제3항)

[예측정보기재 관련 면책 요건]

-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질 것
-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2)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 금융위원회는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②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 거짓기재·미기재, ③ 투자설명서 사용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32조, 제429조 및 동시행령 제138조)

[제재조치]

- 위반사실의 공고 및 정정 명령
- 해당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 정지 또는 금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경고 또는 주의
- 과징금 부과

III. 유상증자 유형별 실무해설

(주주배정방식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유상증자결정」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III-1-(1)
2	「증권신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전 활용시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FSS	III-1-(2) II-3-(1)
3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기준일 설정」 신고	신문/홈페이지 (기준일 2주전 까지) KRX(기준일 2주전 까지)	III-1-(3)
4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발행(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위탁원	III-1-(4)
5	1차 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대행사, 위탁원 FSS, KRX(당일)	III-1-(5)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및 비치	FSS(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III-1-(6)
7	신주배정기준일		III-1-(7)
8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부여 및 사전심사 신청		III-1-(8)
9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원 우선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III-1-(9)
10	신주배정명세 수령		III-1-(10)
11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상장신청	대행사, KRX	III-1-(11)
12	신주배정 통지	(청약일 초일 2주전까지)	III-1-(12)
13	발행가액 확정 및 통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대행사, 위탁원 FSS, KRX(당일)	III-1-(13)
14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III-1-(14) II-3-(2)
15	주주청약		III-1-(15)
16	실권주 및 단주 처리		III-1-(16)
17	주금납입		III-1-(17)
18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대행사, 위탁원	III-1-(18)
1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	III-1-(19)
20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대행사, 위탁원	III-1-(20)
21	증자등기	법원(납입기일부터 2주 이내)	III-1-(21)
22	추가상장 신청	KRX	III-1-(22)

1. 주주배정 방식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식의 발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함(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③ 신주의 인수방법 및 실권주에 관한 사항
- ④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⑥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익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61①5, 동시행령 §171①1)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당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①2가(1))
 - ▷ 금융위(FSS) · 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 · 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이후 3매매거래일 이내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서식을 이용하여 영문공시(KRX)(공시규정 제4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30 이상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의 종류(보통주식, 종류주식 등)와 배정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함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발행가액 :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제한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2 제1항)

- 기준주가 :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 발행공시규정 개정으로 주주배정방식에 대한 발행가액의 제한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기존 관행에 따라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산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	청약일전 제3거래일
기준주가	①·② 중 낮은 가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증가] /3 ② 기산일 증가	③·④ 중 낮은 가액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증가] /2 ④ 기산일증가
발행 가액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할인율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자율결정	

- 납입기일 :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이며,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식은 실권됨(상법 제423조 제2항)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주식인수인은 납입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됨(상법 제423조 제1항)

3)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신주배정기준일), 청약일 및 청약증거금의 징수방법 등을 정함
-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및 청약일 등을 정하여야 함
- 기존에는 조합원 실권분을 주주에게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통지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청약을 먼저 받은 후 실권분을 반영하여 주주 배정비율을 정하고 주주의 청약을 받았으나,
 -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실권분에 대한 주주통지의무가 배제(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3항)되었으므로 조합원과 주주가 같은 기간에 동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4.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참조

4) 실권주에 관한 사항

- 실권주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발행이 허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

- (공통요건) 금융위 고시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 (선택요건) 이하의 ①~④ 중 선택 가능
 - 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② 주주배정시 배정주식 수의 20%까지 초과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 미만의 신주를 발행(소액공모)하는 경우
 - ④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금융위 고시가격 :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발행공시규정 §5-15의2①)

⇒ 실권주 처리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5. 실권주의 처리] 참조

예 시 실권주 발행을 위한 초과청약 배정 예시

- 기발행주식총수가 400만주인 A기업이 200만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구주주 배정비율 : 0.4주 $[(200만주 - 40만주) / 400만주]$
 - 2,016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청약가능 주식수
 - 기본배정 주식수 : 806주 $(2,016주 \times 0.4(배정비율))=806.4$
 - 초과청약가능 주식수 : 161주 $(806주 \times 0.2(초과청약한도))=161.2$
- ⇒ 총 967주 청약 가능

- 기존에 활용하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가액을 기준주가의 60%이상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회사와 인수인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실권주는 미발행처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자매매업자의 전부인수 방식에 의하여 발행이 가능하므로 주주배정시 주주가 청약하지 아니한 실권주를 주선인이 모집·주선하여 발행하는 것은 금지됨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금납입을 금전 대신 현물로 납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 재산의 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그 현물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도 정하여야 함(상법 제416조 제4호)
⇒ 현물출자관련사항은 [I. 증자의개요 - 3. 증자의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6)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위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유통

- 상장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 주주는 본인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함으로써 증자참여 포기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②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추신이나 대리업무를 하도록 지정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

(2) 증권신고서 제출

- 상장회사가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119조)
 - 주주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이므로 모집에 해당
 - 주주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이나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전매기준 적용으로 간주모집에 해당됨. 단,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및 청약일정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19①)

⇒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발행공시 규정 제2-13조)

⇒ 정정신고서제출 관련 자세한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제출 - 제출 및 효력발생 - 2) 정정신고서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 주식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유상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 제출·교부 - (1) 투자설명서의 의의 및 종류] 참조

(3)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 주주배정 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일(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준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상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제418조 제3항)

[공시 Check Point]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KRX)(상장규정 §79①1)

(4)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발행 의뢰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통보하고 신주발행 및 신주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뢰함(전자증권법 제25조).

(5) 1차 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1차 발행가액 산정 후 이를 공시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발행가액 산정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I. 유상증자 유형별 실무해설 - 1. 주주배정 방식 -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참조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및 비치

-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 재계산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3①, 동시행령 §131)

(7)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배정기준일의 직전일에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1항 제1호)
 -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 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최초정지일제외)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임

(8)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부여 및 신주인수권증서 사전심사 신청

- 회사는 신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KRX표준코드시스템 증권표준코드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함.
 - 증권표준코드는 증권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모든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임.
-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3항,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0조).

(9)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모집·매출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배정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청약일 2주간 전 통지·공고를 하지 않고도 주주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청약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에 주주배정시 관행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청약을 받고 약 20여일 후 주주청약을 받은 것은 조합원 실권분을 주주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상법(제419조)에서 정하는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통지기간(2주)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은 발행가액 확정 전에 청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됨
- 우리사주조합 실권분을 주주에게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청약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 실권분 재배정에 따른 기존주주의 배정비율이 변경되므로 기공시 된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행기관에도 변동비율을 통보하여야 함

[공시 Check Point]

- 주주배정비율 변경시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
- 유상증자 청약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0) 신주배정명세 수령

- 명의개서대행회사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명세 수령

(11)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전자등록) 및 상장신청

- 신주인수권증서란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표창한 증서이며,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상법제420조의5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시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상법제420조의3 제1항)
- 상장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②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동시행령 제176조의8 제4항)
 -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권자가 확정된 후에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이후부터 발행가능하며, 청약일 2주 전까지 발행하여야 함(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신주인수권 증서 기재사항] 상법 §420의2②

-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 주식청약서 소정의 사항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 일정기일까지 주식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그 주식과 관련된 권리로서 해당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전자등록업규정 제3-1조)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20조).
- 일반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 본인계좌에 등록이 되며, 전자증권제도 변경시 일반 증권사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주에 대하여 해당 특별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등록됨.
- 다만,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전자등록계좌(증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명의개서대행회사)하여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함.
- 한편,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상장예정일의 5매매일전에 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신청하여야 함(상장규정 제150조, 동 세칙 제124조).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능기간은 5거래일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개시일의 5매매일 전에 상장폐지됨(상장규정 제152조 제2항 제2호)

(12) 신주배정통지 발송

- 신주배정명세 확정 후 청약일의 2주전까지 신주인수권자인 주주에게 ① 배정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는 경우 실권한다는 뜻,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419조).

(13)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20조 제2항 및 제3항)
-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2차 발행가액 산정 후 이를 공시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실권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 5-15조의2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정 공시

예 시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기산일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 ▶기준주가 : ①, ② 중 낮은가액 ① [1개월평균+1주일평균+기산일종가] / 3 ② 기산일종가		▶기산일 : 청약일 전 3거래일 ▶기준주가 : ①, ② 중 낮은가액 ① [1주일평균+기산일종가] / 2 ② 기산일종가	
↓			
I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	확정발행가액 I, II 중 큰 가액	
II	[실권주를 발행하는 경우]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40%)		

(14)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은[II.유상증자관련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 제출·교부 -(2)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참조

(15) 주주청약

- 주주배정방식은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이 의무적이므로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함(상법 제420조의5 제1항)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전자등록계좌(증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명의개서대행회사)하여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하지만, 청약은 이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함.
 - 주주가 직접(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청약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이중 청약인 경우 직접청약이 유효하므로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청약한 청약대금은 예탁결제원에 반환하여야 함.

-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자는 그 권리를 상실함(상법 제419조 제3항)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청약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6) 실권주 및 단주 처리

- 청약기간동안 청약되지 않은 주식(실권주)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발행결의 당시 실권주 처리방법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이에 따라 실권주를 처리함
⇒ 실권주 처리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5. 실권주의 처리] 참조
- 단주는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주 발생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443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상법상 단주 처리 방법] 상법 §443

- 단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
-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며,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

(17) 주금납입

- 신주청약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에 미리 납부한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함
 -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에 신주인수인이 납입을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청약시에 100%의 청약증거금을 예납받아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충당함
⇒ 납입유형에 관한 사항은[I. 증자의개요 - 3. 증자의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18)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 회사는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실권주 인수 등으로 신규주주가 발생한 경우는 청약결과 통보시 신규주주에 대한 실명

- 확인 및 증권사 계좌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청약결과통보문서에 따라 최종 배정, 특별계좌부 등재, 발행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함.

(1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8, 발행공시규정 §2-19①)
-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20) 주식발행 등록 신청 등

-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제1항).

(21) 증자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자본금의 액(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 등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등이 증가하므로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본 점소재지 2주 이내, 지점소재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변경등기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426조)

(22) 추가상장 신청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새로 발행된 주권을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납입일의 익일) 지체없이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제2항)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

장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추가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추가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주우선공모방식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III-2-(1)
	「유상증자결정」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2	주관회사 선정 및 인수계약 등 체결	주관사	III-2-(2)
3	「증권신고서」 제출	FSS	III-2-(3)
	* 필요시 예비투자설명서 함께 제출		II-3-(1)
4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 (기준일 2주전 까지)	III-2-(4)
	「기준일 설정」 신고	KRX(기준일 2주전 까지)	
5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발행(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위탁원	III-2-(5)
6	예정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대행사, 위탁원	III-2-(6)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FSS, KRX(당일)	
7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III-2-(7)
8	주주확정기준일		III-2-(8)
9	신주배정명세 수령		III-2-(9)
10	주주청약 통지	(청약일 2주전까지)	III-2-(10)
11	발행가액 확정 및 통보	대행사, 위탁원	III-2-(1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FSS, KRX(당일)	
12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III-2-(12)
13	주주 및 권리사주조합 청약		III-2-(13)
14	일반공모 청약 공고	주관회사	III-2-(14)
	일반공모 청약		
	청약결과집계 및 배정 공고		
15	주금납입		III-2-(15)
16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대행사, 위탁원	III-2-(16)
17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	III-2-(17)
18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대행사, 위탁원	III-2-(18)
18	증자등기	법원(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	III-1-(19)
19	추가상장 신청	KRX	III-1-(20)

*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실권분을 일반에게 공모하는 것을 전제로 함
(주주배정후 실권주 공모와 실질상 동일하나 신주인수권증서발행이 의무화 되지 않으며 계좌간 대체거래가불가하
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모집주선방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2. 주주우선공모 방식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식의 발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함(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③ 신주의 인수방법 및 실권주에 관한 사항
- ④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익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161①5, 동시행령 §171①1)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당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①2가(1))
⇒ 금융위(FSS)·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이후 3매매거래일 이내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서식을 이용하여 영문공시(KRX)(공시규정 제4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신주의 종류(보통주식, 종류주식 등)와 수를 정하여야 함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발행가액 :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의 한 유형이므로 발행가액 산정 시 일반공모의 규정에 따름(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구 분	공모방식
발행가액	기준주가에서 3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
기산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 납입기일 :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이며,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식은 실권됨 (상법제423조제2항)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주식인수인은 납입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됨(상법 제423조 제1항)

3) 신주의 배정방법

- 우선청약을 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청약일 및 청약증거금의 징수방법 등을 정함
-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및 청약일 등을 정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4.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참조
-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분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방식에 대한 사항도 정하여야 함

4) 실권주에 관한 사항

- 실권주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발행이 허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실권주 처리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5. 실권주의 처리] 참조
- 주주우선공모는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고 미청약 주식을 일반에 공모하는 방식이므로 일반공모절차가 완료된 이후 잔여주식이 실권주에 해당하며, 실권주는 인수계약 등에 따라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인수하고, 모집주선의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하여야 함
- 주주 청약시점에서는 실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배정방식과 같이 주주가 초과청약 하는 방식으로 실권주 처리를 할 수 없음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

- (공통요건) 금융위 고시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 (선택요건) 이하의 ①~③ 중 선택 가능
 - 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 미만의 신주를 발행(소액공모)하는 경우
 - ③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 금융위 고시가격 :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발행공시규정 §5-15의2①)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금납입을 금전 대신 현물로 납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 재산의 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그 현물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도 정하여야 함(상법 제416조 제4호)
- ⇒ 현물출자관련사항은 [I. 증자의개요 - 3. 증자의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분류]참조

(2) 주관회사 선정 및 인수계약 등 체결

- 신주모집과 실권주 처리 등 업무를 대행할 주관회사를 정하고 인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등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함(인수업무규정 제2조 제5호)

(3) 증권신고서 제출

-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모집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119조)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및 청약일정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19①)

⇒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유상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

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발행공시 규정 제2-13조)

⇒ 정정신고서제출 관련 자세한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제출 - (3)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2) 정정신고서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 주식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관련자세한 사항은 [II.유상증자 관련발행공시제도 - 3.투자설명서의제출 · 교부 - (1)투자설명서의 의의 및 종류] 참조

(4)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우선청약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일(주주확정일)을 정하여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우선청약권을 가진다는 뜻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준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상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제418조 제3항, 발행공시규정 제5-20조 제1항)
- 기준일이 기존에 설정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함

[공시 Check Point]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신고(KRX)(상장규정 §79①1)

(5)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전자등록 신청 의뢰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통보하고 신주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의뢰함(전자증권법 제25조).

(6) 예정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 기준일(주주확정일)을 기준으로 예정발행가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예정발행가액은 통상적으로 권리락조치를 위하여 기준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0% 이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

(7)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및 비치

-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 재계산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3①)

(8) 주주확정기준일

- 기준일(주주확정일)의 직전일에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업무규정 제132조 제1항 제1호)
 -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 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일을 기준일로 하며,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최초정지일제외)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임

(9) 신주배정명세 수령

- 명의개서대행회사로부터 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명세 수령

(10) 주주청약 통지서 발송

- 신주배정명세 확정 후 청약일의 2주전까지 우선청약자인 주주에게 ① 배정주식(우선청약가능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는 경우 실권한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11) 발행가액 확정·공시

-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20조 제2항 및 제3항)

-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
가로 하여 할인율(30% 이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정 공시

(12)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
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 ⇒ 투자설명서교부관련사항은[II. 유상증자관련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제출·교부
- (2)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참조

(13) 주주 등 청약

-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하며(상법 제420조), 청약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함(상법 제419조 제3항)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전자등
록계좌(증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명의개서대행회사)하여야 신주인수
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하지만, 청약은 이전 신청은 하지 않더라도 가능함.
- 주주가 직접(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청약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
원에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이중 청약인 경우 직접청약이 유효하므로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청약한 청약대금은 예탁결제원에 반환하여야 함.
-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우리사주조합원 실권분을 주주
에게 추가배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주청약과 조합원 청약을 동시에 진행
함.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청약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
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4) 일반공모 청약 공고 및 청약

- 우리사주조합과 기존 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주를 일반에 공모하기 위
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가 공동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안내공고를 하고 청약
접수를 받음

- 주관회사는 청약이 종료되면 청약단위별 배정 내역을 청약안내 공고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청약증거금이 배정주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일까지 초과분을 환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받음.
- 일반공모 청약기간동안 청약되지 않은 주식(실권주)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발행결의 당시 실권주 처리방법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이에 따라 실권주를 처리함.
 - 실권주 처리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5. 실권주의 처리] 참조

(15) 주금납입

- 신주청약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에 미리 납부한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함
 - ⇒ 납입유형에 관한 사항은[I. 증자의 개요 - 3. 증자의 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 (상법 제423조 제1항)

(16)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 회사는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일반공모 등으로 신규주주가 발생한 경우는 청약결과 통보시 신규주주에 대한 실명확인 및 증권사 계좌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청약결과통보문서에 따라 최종 배정, 특별계좌부 등재, 발행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함.

(17)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8, 발행공시규정 §2-19①)
-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8)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제1항).

(19) 증자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자본금의 액(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 등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등이 증가하므로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변경등기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426조)

(20) 추가상장 신청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새로 발행된 주권을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납입일의 익일) 지체없이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제2항)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추가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추가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반공모방식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III-3-(1)
	「유상증자결정」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2	주관회사 선정 및 인수계약 등 체결	주관사	III-3-(2)
3	「증권신고서」 제출 * 필요시 예비투자설명서 함께 제출	FSS	III-3-(3)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III-3-(4)
5	신주발행 및 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예탁원	III-3-(5)
6	발행가액 확정·통보	대행사	III-3-(6)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FSS, KRX(당일)	
7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III-3-(7)
8	일반공모 청약 공고	주관회사	III-3-(8)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원 동시 청약		
	청약결과집계 및 배정 공고		
9	주금납입		III-3-(9)
10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대행사, 예탁원	III-3-(10)
1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	III-3-(11)
12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대행사, 예탁원	III-3-(12)
13	증자등기	법원(납입기일부 2주 이내)	III-3-(13)
14	추가상장 신청	KRX	III-3-(14)

3. 일반공모 방식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식의 발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함(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③ 신주의 인수방법 및 실권주에 관한 사항
- ④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익일까지 「유상증자결정」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161①5, 동시행령 \$171①1)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당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①2가(1))
⇒ 금융위(FSS) · 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 · 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이후 3매매거래일 이내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서식을 이용하여 영문공시(KRX)(공시규정 제4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신주의 종류(보통주식, 종류주식 등)와 수를 정하여야 함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발행가액 : 일반공모의 경우 발행공시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의 제한을 적용받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하는 경우는 제외(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5항)

구 분	공모방식
발행가액	기준주가에서 3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
기산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 납입기일 :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함

날이며,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식은 실권됨(상법 제423조 제2항)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됨(상법 제423조 제1항)

3) 신주의 배정방법

-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및 청약일 등을 정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4.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참조

4) 실권주에 관한 사항

- 실권주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발행이 허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실권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실권주 발행을 위한 요건]

- (공통요건) 금융위 고시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 (선택요건) 이하의 ①~③ 중 선택 가능
 - 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 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억원 미만의 신주를 발행(소액공모)하는 경우
 - ③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 * 금융위 고시가격 :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발행공시규정 §5-15의2①)

- 일반공모 절차가 완료된 이후 미청약 주식이 실권주에 해당하며, 실권주는 인수계약 등에 따라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인수하고, 모집·주선의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
- 일반공모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배정이 없으므로 주주배정방식과 같이 주주가 초과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권주 처리를 할 수 없음.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금납입을 금전 대신 현물로 납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 재산의 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그 현물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도 정하여야 함(상법 제416조 제4호).
⇒ 현물출자관련사항은 [I.증자의개요 - 3.증자의형태 - (1)유상증자 - 4)납입방법에따른분

류]참조

(2) 주관회사 선정 및 인수계약 등 체결

- 신주모집과 실권주 처리 등 업무를 대행할 주관회사를 정하고 인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등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함(인수업무규정 제2조 제5호)

(3) 증권신고서 제출

- 불특정다수인(해당 회사의 주주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모집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119조)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및 청약일정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19①)

⇒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발행공시규정 제2-13조)

⇒ 정정신고서제출 관련 자세한사항은 [II. 유상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 제출 - (3)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2) 정정신고서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 주식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유상증자 관련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 제출 · 교부 - (1) 투자설명서의 의의 및 종류] 참조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및 비치

- 일반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 재계산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3①)

(5) 신주발행(전자등록 신청) 의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주발행 및 신주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뢰함(전자증권법 제25조)

(6)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20조 제3항)
 -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30% 이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정 공시

(7) 투자설명서 교부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은[Ⅱ. 유상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제출·교부 - (2)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참조

(8) 우리사주조합원 및 일반 청약

-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함(상법 제420조)
- 일반공모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우리사주조합원 실권분을 주주에게 추가배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일반청약과 조합원 청약을 동시에 진행함

- 주관회사는 청약이 종료되면 청약단위별 배정 내역을 청약안내 공고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청약증거금이 배정주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초과분을 환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받음.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청약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 청약기간동안 청약되지 않은 주식(실권주)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여야 하며, 발행결의당시 실권주 처리방법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이에 따라 실권주를 처리함
⇒ 실권주 처리 관련 사항은 [I. 증자의 개요 - 5. 실권주의 처리] 참조

(9) 주금납입

- 신주청약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에 미리 납부한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대체하여 납입함
 - 원칙적으로 납입기일에 신주인수인이 납입을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청약시에 100%의 청약증거금을 예납받아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충당함
⇒ 납입유형에 관한 사항은[I. 증자의개요 - 3. 증자의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10)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 회사는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일반공모 등으로 신규주주가 발생한 경우는 청약결과 통보시 신규주주에 대한 실명확인 및 증권사 계좌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청약결과통보문서에 따라 최종 배정, 특별계좌부 등재, 발행등록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함.

(1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8, 발행공시규정 §2-19①)
-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2) 주식발행 등록 신청 등

-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제1항).

(13) 증자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자본금의 액(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 등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등이 증가하므로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변경등기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426조)
- 주금납입 및 증자등기를 마친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14) 추가상장 신청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새로발행된 주권을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납입일의 익일) 지체없이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제2항)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추가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 | |
|---------------------------------|--------------|
| • 추가상장신청서 |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 • 법인등기부등본 |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
|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배정 방식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III-4-(1)
	「유상증자결정」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무 동시 이행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2	「증권신고서」 제출	FSS	III-4-(2)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III-4-(3)
4	투자설명서 발송(교부)		III-4-(4)
5	신주 발행(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III-4-(5)
6	발행가액 확정·통보	대행사	III-4-(6)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	FSS, KRX(당일)	
7	주금납입		III-4-(7)
8	청약결과 통보	대행사	III-4-(8)
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	III-4-(9)
10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대행사, 위탁원	III-4-(10)
11	증자등기	법원(납입기일부터 2주 이내)	III-4-(11)
12	추가상장 신청	KRX	III-4-(12)

*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기간만큼 발행기간이 단축됨.

4. 제3자배정 방식

(1)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식의 발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함(상법 제416조)
 - 제3자배정은 정관에 제3자배정에 대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음(상법 제418조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③ 신주의 배정방법
- ④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상법에 따르면 제3자배정증자시 발행관련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하여야 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일의 1주전까지 제출한 경우 통지·공고의무가 면제됨(상법 제41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공시 Check Point]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익일까지 「유상증자결정」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161①5, 동시행령 §171①1)
-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당일까지 「유상증자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①2가(1))
⇒ 금융위(FSS)·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이후 3매매거래일 이내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서식을 이용하여 영문공시(KRX)(공시규정 제4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신주의 종류(보통주식, 종류주식 등)와 배정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함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발행가액 : 제3자배정시 발행공시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의 제한을 적용받음(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 제3자배정시 발행가액은 전매제한조치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됨.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일반)에는 청약일 기준 산정방식(발행공시규정제5-18조제1항)만 적용할 수 있으나, 전매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기준 산정방식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2항)

구 분	청약일 기준 산정방식	이사회결의일 기준 산정방식
발행가액	기준주가에서 10% 이내로 할인된 가격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 (총거래금액/총거래량)	아래의 ①, ② 중 낮은 가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 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 가)/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 납입기일 :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이며,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식은 실권됨(상법 제423조 제2항)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주식인수인은 납입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됨(상법 제423조 제1항)

3)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배정 대상인 특정인(제3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의무가 없음
- 자본시장법 및 발행공시규정상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실권주 발행이 가능한 것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 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3자배정은 회사와 제3자간의 신주인수계약이므로 발행 당시 정한 제3자가 청약 또는 납입하지 않은 주식(실권주)은 발행할 수 없음(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유상증자 절차 변경 유의사항, 2013.9.27.자)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금납입을 금전 대신 현물로 납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 재산의 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그 현물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도 정하여야 함(상법 제416조 제4호)
 - ⇒ 현물출자관련사항은 [1. 증자의개요 - 3. 증자의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2) 증권신고서 제출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제3자배정 신주배정대상이 되는 특정인이 50인 이상에 해당되어 '모집'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 신주배정대상이 50인을 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사모'에 해당되더라도 상장회사의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으로 '간주'하여(간주모집)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1항)
 - 주식 발행시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코넥스시장제외)에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 효력발생기간 및 청약일정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19①)

⇒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발행공시규정 제2-13조)

⇒ 정정신고서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II. 증자 관련 발행공시제도 - 2. 증권신고서의제출 - (3)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2) 정정신고서 제출] 참조

-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 주식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관련자세한 사항은 [II. 유상증자 관련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 제출·교부 - (1) 투자설명서의 의의 및 종류] 참조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사모'로 발행하는 주식에 전매기준에 해당되어 간주모집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항)

[주식의 전매제한조치]

- ① 주식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②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제3자배정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제120조,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 재계산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출의무도 면제됨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3①)

(4) 투자설명서 교부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제3자배정의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없음
-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은[II. 유상증자관련발행공시제도 - 3. 투자설명서의 제출·교부 - (2)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참조

(5) 신주 발행(전자등록 신청) 의뢰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통보하고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뢰함(전자증권법 제25조).

(6) 발행가액 확정 및 공시

-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20조 제3항)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제3자배정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 이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
 -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추가로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

[공시 Check Point]

-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된 때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공시(KRX)(발행공시규정 §5-20③)
- 기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정 공시

(7) 주금납입

-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 ⇒ 납입유형에 관한 사항은[I. 증자의 개요 - 3. 증자의 형태 - (1) 유상증자 - 4)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참조

(8) 유상증자 청약결과 통보

- 회사는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청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제3자배정으로 신규주주가 발생한 경우는 청약결과 통보시 신규주주에 대한 실명확인 및 증권사 계좌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청약결과통보문서에 따라 최종 배정, 특별계좌부 등재, 발행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함.

(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제3자배정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제1항)
 -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28, 발행공시규정 §2-19①)
-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 동시행세칙 §8)

(10)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제1항).
- 발행된 신주가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일 전일에 의무보유를 신청(예탁결제원)하여 함.

(11) 증자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자본금의 액(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 등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등이 증가하므로 주권납입일의 익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변경등기시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426조)

(12) 추가상장 신청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새로발행된 주권을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납입일의 익일) 지체없이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제2항)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추가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추가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발행된 신주가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일 전일에 의무보유를 신청(예탁결제원)하여 의무보유 청구내역서를 제출하고, 상장일 당일 의무보유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함

IV. 무상증자 실무해설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무상증자 결정 이사회 결의		IV-1-(1)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수시공시의 무 동시 이행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2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 (기준일 2주전 까지)	IV-1-(2)
3	신주발행 및 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IV-1-(3)
4	신주배정기준일		IV-1-(4)
5	신주배정 통지	주주 (신주배정명세 작성 후 지체없이)	IV-1-(5)
6	증자등기	법원 (신주배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	IV-1-(6)
7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대행사, 예탁원	IV-1-(7)
8	추가상장신청	KRX	IV-1-(8)
9	단주대금 기준가 통보 및 지급 * 상장초일증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상장일 이후	대행사, 예탁원	IV-1-(9)
10	원천징수세액 납부	세무서 (교부일 익일 10일까지)	IV-1-(10)

* 무상증자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경우의 일정표이며,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일정이 추가되어야 함.

1. 무상증자 실무절차

(1) 무상증자 결정 이사회 결의

-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자본전입 금액과 재원, 신주배정기준일 등을 결의함(상법 제461조 제1항)

1) 자본전입 금액 및 재원

- 상법상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하여 전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임
 - 확정된 대차대조표상 준비금에 한하여 전입이 가능하며, 영업연도 중간에 발생한 준비금은 전입대상이 아님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의제배당)하여 무상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16조, 동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7조 제4항)

2) 발행할 주식 수

- 무상증자는 별도의 납입이 없으므로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배정(상법 제461조 제2항)함
 - 무상증자의 법적성격을 주식분할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90856 판결) 및 다수 견해이므로 종류주식을발행한 경우 종류주주에게는 동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여야 함
 -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 가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3) 신주배정기준일

- 무상주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무상증자를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의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416조 제3항)

4) 단주처리방법

- 단주 발생시 단주를 매각하여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61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단주처리방법에 대하여도 결의가 필요함

[공시 Check Point]

- 무상증자 결정 이사회 익일까지 「무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61①5, 동시행령 §171①1)
- 무상증자 결정 이사회 당일까지 「무상증자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①2가(1))
 - ⇒ 금융위(FSS)·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 ⇒ 배정비율 10% 이상의 경우 중요내용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공시시점부터 30분간)(공시규정 시행세칙 §16①4, §16③2)
-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유상증자 결정 이사회 이후 3매매거래일 이내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서식을 이용하여 영문공시(KRX)(공시규정 제48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2)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결정 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뜻 등을 기재하여 기준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정관상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제461조 제3항)

[공시 Check Point]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기준일 설정」 신고(KRX)(상장규정 §79①1)

(3) 신주발행 및 전자등록 신청 인리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주발행 및 신주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뢰함(전자등록법 제25조)

(4)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배정기준일의 직전일에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1항 제1호)
 - 기준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의 직전일을 기준일로 함.

(5) 신주배정통지 발송

- 신주배정기준일(또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신주를 배정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의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461조 제5항).

- 이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권리주주와 질권자를 확정하고 신주배정명세를 작성하여 발행인에 인계함. 발행인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주배정명세를 수령하게 됨.

(6) 증자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자본금의 액(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 등 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등이 증가하므로 신주배정기준일(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본점소재지 2주 이내, 지점소재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
- 무상증자로 인해 발행한 신주의 효력발생은 이사회 결의시 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일부터 발생함

(7) 주식발행등록 신청 등

-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제1항).

(8) 추가상장 신청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새로 발행된 주권을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신주배정기준일 등) 지체없이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3조 제2항)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추가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 | |
|---------------------------------|--------------|
| • 추가상장신청서 |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 • 법인등기부등본 |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
|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9) 단주대금 기준가 통보 및 지급

- 신주배정 결과 단주가 발생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상법 제461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함.
 - 발행인은 단주대금 기준가액이 확정되면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단주대금 산정 및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하여야 함.
- 단주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단주대금 지급명세 작성 등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상장일로 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함.
 - 단주대금은 단주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입금하여야 함.

(10) 원천징수세액 납부

- 무상증자 재원에 의해 주주가 배정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발행회사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128조)
 - 의제배당 시기는 무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임(법인세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자주 묻는 Q&A

- 국세상담센터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 외국인

Q.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조특, 법규과-803(2014.07.29)

◎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

Q.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 60세 이상 근로자

Q.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및 제3항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 60세 이상 근로자

Q.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참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및 제3항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조특, 서면-2022-법규법안-3940 [법규과-1538] , 2023.06.15

◎ 상시근로자 - 임원

Q. 2020년 3월에 개업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1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요?

A.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청년, 29세 → 30세가 된 경우)

Q.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 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05.09.)

◎ 상시근로자 수 (본점 및 지점)

Q.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 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인가요?

A.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19-법인-3754(2020.07.10.)

◎ 심시근로자 수 (창업 - 신설법인)

Q.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상시근로자 수 (법인 전환하는 경우)

Q.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조특,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 조특, 서면법규과-599(2014.06.17)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2020.06.24.)

◎ 상시근로자 수 (분할 신설법인)

Q. 분할신설법인이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조특, 서면-2020-법인-3242 (2020.10.29)
- 조특,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 상시근로자 수 (사업연도 개월 수 - 신설법인)

Q.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에 있어서 2022. 5. 1. 신설법인 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12. 31. 까지 입니다.

<참고> 2022. 5. 1. 설립등기한 법인의 사업연도 개월 수는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 조특,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 2022.04.21.

◎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0.25명 공제여부)

Q.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0.25명)

A.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Q.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

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 (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추가 공제 (2차년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Q.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 추가 공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Q. '21년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2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2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공제세액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 추가납부('20년 전체상시근로자 수 감소)

Q. '18년 및 '19년 대비 '20년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A.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1. 3. 1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개정으로 인하여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1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18년(최초) ~ '19년(최초·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납부는 유예되나, '18년도분 3차년도 추가공제와 '19년도분 2차년도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 추가 납부 (이월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

Q.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상 "소멸"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 추가 납부 (가산세 적용여부 및 작성 서류)

Q.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감면분추가납부세액'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납부세액' 기재

● 추가 납부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방법)

Q.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법인세 신고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며,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 상11번 기납부세액란 (+ 금액),12번 · 14번차감납부할세액란 (- 금액)에 각각 기재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후 다음 해 다시 증가하는 경우

Q.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사업연도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사업연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2020년 공제세액에 대한 2차·3차년도 추가공제 및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와는 별개로 2022년 상시근로자가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인-5510(2021.01.18.)

◎ 이월공제 세액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Q. 해당 사업연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 이하, 최저한세로 인한 미공제액이 8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상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이월공제 세액 발생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상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구분, 사업연도, 당기분 (공제세액·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이월액란에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세액감면·공제 중복적용 배제

◎ 투자세액 공제

Q. 투자세액공제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동일한 사업연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동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3항·동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25조·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세법개정으로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5조·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7 규정을 적용받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조특법 제6조·제5조·제30조의4

- Q.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조특법 제6조 제7항 · 제29조의7

Q.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특법 제6조 · 제7조 · 제63조 · 제99조의11 제1항

Q.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동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동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가동법 *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 조특법 제7조 · 제5조 · 제30조의4

Q.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

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7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조특법 제10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63조

Q.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10조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는 2020. 12. 29. 삭제되고, 동법 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특법 제10조 · 제29조의7 · 제30조의4

Q.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특법 제19조 제1항·제29조의4

- Q.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동일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조특법 제24조·제6조·제7조

- Q.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제25조·제25조의4·제25조의 5·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세법개정으로 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통합 전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특법 제29조의7 · 제30조의4

Q.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Q.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가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특법 제99조의11 제1항 · 제30조의4

Q.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개인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 설립

Q.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업종이 다른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거주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조특, 서면-2020-법인-1206(2020.03.27)
- 조특, 제도46012-12677(2001.08.16)
- 법인, 서면2탐-2313(2004.11.12)
- 조특, 서면-2020-법인-1374(2020.03.27)
- 조특, 법인세과-117(2011.02.15.)

◎ (창업)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 개업 시

Q.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

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2005.04.27)
- 조특, 서면-2020-법인-0136(2020.09.09)

● 창업이후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Q.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조특, 서면-2018-법인-3040(2019.06.05.)

● 최대주주가 2인

Q.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지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조특, 서면-2019-법인-0673(2019.04.22.)

●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대표자 변경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계속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기존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Q.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2항(창업벤처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2019.5.23)
-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2019.05.24.)

◎ 벤처기업 유형 변경 시

Q.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 유형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조특, 서면-2019-법인-1741(2019.09.19)
- 조특, 법인 46012-4292(1999.12.13.)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감면 유지 여부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 조특, 서면-2016-법인-5363(2019.04.02)
- 조특, 서면-2018-법인-3657(2019.10.3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 폐쇄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1 제2항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2019.02.15.)

◎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외로 이전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비율(50%→100%)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감면비율(10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창업당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19-법인-1797(2020.09.21)
-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2015년도 소기업인 경우

Q.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2016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나, 2017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2016.1.1.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 - 2016. 2. 5. 개정되기 전)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개정법률 시행(2016. 1. 1.) 이후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규정 - 2016. 2. 5.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2019.12.30)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 2015년도 소기업이 아닌 경우

Q.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16년도에 종전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나, 개정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 2. 5> 제22조의 규정은 2016. 1. 1. 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제22조
- 조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2018.04.10)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04.06.)

◎ 개인이 법인 전환 시 경과규정 적용여부

Q. 2015~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이 2017년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소기업에 해당된 개인이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제 22조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특, 서면-2018-법인-2504(2020.02.18)
- 조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2017.07.2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Q.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2019. 2.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021.01.22.)

◎ 임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Q. 임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A. 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2015.10.06)
- 조특, 서면-2016-법인-5678(2017.09.04)

◎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주주임원

Q.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임원인 연구전담요원이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조특, 서면법규과-1017(2014.9.21)
- 조특, 서면-2017-법인-2477(2017.12.08.)

◎ 국가로부터 지원금 수령

Q.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지출 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력개발비는 '19.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반영되었으나, 법령 개정 전에도 해석사례 등에서는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2018.11.14)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 Q.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은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0항

◎ 연구노트 작성 여부

- Q.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A.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 의무사항 여부

Q.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A.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 제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사전심사제도는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제10조

◎ 신청대상 및 방법

Q. 사전심사 신청대상·기한·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대상] 법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
-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청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신청 시 제출 서류

Q.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 법인세>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사전심사에 다른 혜택

Q.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전심사 신청하는 법인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A. 사전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고내용 확인)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감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 공제 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는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Q.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세액공제 적용시기

Q. '21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A.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1사업연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8조

◎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

Q.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 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Q.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2023년 사업연도에 2차 공제에 해당할 시에, 조특법 29조의7의 적용에 따른 2차공제를 적용할 경우, 2023년도 고용증가에 따른 조특법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못하는 건지?

A.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조특,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 2023.06.08.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Q. 통합고용증대세액계산시 청년나이기준 2023년1월1일이후를 기준으로 입사자부터 나이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계산하는지 ?

A.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8)의 경우 청년의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되었으므로 2023년 귀속 1차년도 공제(2022년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시 15~34세를 기준으로하여 직전 및 당해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 고용증대 및 통합고용증대세액 신고시 제출 서식

Q. A회사에서 22년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을 받아 신고하였는데, 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으려고 한다면 A회사는 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2장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 1) 21년도 3차년도, 22년도 2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신고서 1장 (23년도 공제x)
- 2) 23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 신고서 1장

A.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연근무·휴가제도는 이렇게 도입합니다

- 고용노동부 -

■ 유연근무·휴가제도란 무엇인가요

1. 유연근무·휴가제도란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Work-life balance)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 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됨

<유연근무제의 유형>

-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 유연화 ② 근무장소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주요 유형
①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제58조 ①,②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③항)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에도 집중(집약)근로제, 시차 출퇴근제 등
② 근무장소 다양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③ 근무량 조정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장기휴가, 안식년 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와 노사간 자율로 정하는 약정휴가 등이 있음

☞ 법으로 정한 휴가나 노사간에 정한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휴직은 장기간의 휴가를 통해 직무수행을 정지)

☞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휴가제도의 유형>

구분	법정휴가	약정휴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제 산전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업무상재해 휴직,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계휴가 경조휴가 안식년휴가(장기휴가) 병가 청원휴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수 및 부여방식이 법률로 정해짐 법 기준 이상 휴가부여는 노사 자율 결정 임금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수 및 부여조건, 임금지급 여부 등 제반 조건을 모두 노사 자율로 결정

2. 유연근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유형 및 적합직종

구분	주요 유형
탄력적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주40시간)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 도입 가능
선택적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 - 연구직, 판매 비중이 높은 도소매 업종에 도입 가능
사업장밖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 등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에 도입 가능
재량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성격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무제도 - 연구개발, IT, 방송 등 법에서 정한 업종에 도입 가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주간집중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근무시간 중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집중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하는 근무제도 - 연구, 개발 등 노사가 특정하는 모든 업종에 도입 가능

적합 직종의 특성

- 일정조정이 가능한 사무실 기반의 직무
- 특정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한 경우
- 정책, 기획 등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직무

◎ 근무장소 다양화 제도 유형 및 적합직종

유 형	주요 유형
재택근무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제도
원격근무	대부분의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근무제도

적합 직종의 특성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 가능한 전문적, 학술적 직무
물리적 결합이나 긴급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직무

◎ 근무량 조정 제도 유형 및 적합직종

유 형	주요 유형
직무공유제	전일제 일자리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는 제도
시간제근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적합 직종의 특성

근무시간을 달리하더라도 생산 또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무
긴급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직무

◎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유형 및 적합직종

유 형	개 념
보상휴가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안식년 제도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1년 내외의 휴가를 주는 제도
가족돌봄휴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적합 직종의 특성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 교육 등의 직무

3.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 고객수요에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
 -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제고하여 성과와 직무능력을 향상시킴
- 근무장소 다양화 제도
 - 근무장소의 분산을 통해 업무기반 시설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새로운 지역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 산재된 잠재고객까지 유치할 수 있음
- 근무량 조정 제도
 - 근무강도를 조정하여 고숙련 인력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장기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며,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직무공유를 통해 기술공백을 최소화
-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
 - 휴가 또는 휴직제도를 통해 고숙련, 고연령 인력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제공, 업무 수행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고용의 가능성을 높임
 - 전문적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 투입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확보 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함

<유연근무•휴가제도 실행에 따른 성과 요약>

근로자 측면	기업 측면
일·가정 양립과 직무만족, 직무능력 향상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우수인재 확보

II.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나요

1. 노사상호 이익의 원칙

◎ 유연근무·휴가제도를 통해 ‘노사상호이익’의 선순환 관계 구축

- 유연근무·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킴. 이를 노사상호이익의 원칙이라 함
- 노사상호이익의 원칙이 지켜질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음
- 단순히 선진기업들이 시행하는 유연근무제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 도입과 실행에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도입과정부터 실행과 장애요인 극복까지 노사상호이익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노사상호이익 선순환을 구축하려면

- 생산성 향상 전략
 - 유연근무·휴가제도는 경영 환경의 변화, 고객과 근로자의 요구변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노사간 상호이익 원칙 아래 생산성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함
 - 노사간 상호이익 원칙 아래 근로자와 회사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유연근무·휴가제도의 실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면서 구성원 상호간 대면 접촉 시간이 감소하고,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유연근무제도 적용 근로자와 비적용 근로자 간의 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개별 근로자와 기업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창조적인 유연근무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율적 신청, 관리자와의 협의, 회사의 승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효과적 노사협의
 -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제도 도입 준비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충분

히 반영하여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제도가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함

-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등 근로조건의 악화를 우려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이러한 우려 없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음
- 노사협회는 회사와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간의 집단적 방식과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방식의 협의를 모두 포괄함

◎ 유연근무·휴가제도 지원시스템이란

- 대안적 의사소통 시스템 : 근로자가 회사에 없더라도 IT기반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통해 마치 옆자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음
 - ☞ Off-line기반에서 IT기술을 활용한 On-line 기반으로 의사소통시스템 개선
- 인사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 근무시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업적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 ☞ 정성적 평가기준에서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일방향 평가에서 다면평가를 통한 상호평가 중심으로 개선

2. 유연근무와 휴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3요소

◎ 성공적인 유연근무·휴가제도 정착을 위한 3요소

-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노사간 또는 근로자들간의 갈등,
-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3가지 요소가 필요함
-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노력
- 제도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시스템
- 노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실행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유연 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실시

1.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노력

① 유연근무 친화적 리더십

- 조직구성원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를 적극 지원하는 최고경영자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 CEO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권장하고, 유연근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발견하

여 해결(설명회/회의를 통한 의사소통)

② 유연근무 친화적 조직변화(유연근무를 권장하는 조직문화)

- 관리자 및 구성원 교육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연근무제도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할 필요
- ☞ 상명하달식보다는 의견공유 및 상호협력적 업무방식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③ 유연근무 친화적 인적자원 관리

- 유연근무제 또는 휴가제도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등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된 유연근무 친화적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함
- ☞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인사제도는 유연근무제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보다는 업무성과에 기반한 평가제도와 보상제도 운영

2.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① 제도 설계/선택 지원 시스템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관리자의 승인 및 제도실행을 지원하는 IT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제도도입과 실행시 노사간 의사소통과 노사협의를 진행 해야 함
- ☞ 유연근무제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근무장소), On-line 의사소통 시스템, e-HR, IT기반 On-line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

② 대안적 의사소통 시스템

- 장소의 분리, 보안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등 다양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함
- ☞ 스마트폰 및 PC를 활용한 사내메신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캘린더 등을 통해 유연 근무제 하에서도 의사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

③ 성과관리 시스템

- 유연근무 도입 하에서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 근무시간보다는 목표부여와 그 달성여부를 측정, 평가하는 인사평가제도 운영

3. 노사협의를 통한 점진적 운영

① 제도원칙에 대한 노사합의

- 기업과 근로자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원칙 등을 전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도출하고 공유함

-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노사간 협의하고,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포함)

② 분권화된 제도설정 권한

- 근로자 개인의 요구, 과업,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요구, 설정할 수 있도록 물적(IT기술)기반을 확충하고,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
- ☞ 부서가 많고, 근무형태가 다양할수록 유연근무제 실시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선택 및 신청권을 부여하고, 부서단위 관리자의 의사결정 재량권을 인정하여 (위임 전결규정 등의 개선) 부서장 책임하에 자유로운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함

③ 시범운영 등 단계적 도입

- 노사가 함께 유연근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를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함
- ☞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일시에 모든 대상에 대해 적용하기 보다는, 유연근무제 실시가 용이한 부서나 대상자별로 제도를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보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

3.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유연근무·휴가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 유연근무제를 처음 도입하거나 휴가제도를 장려하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3가지 유연성 함정이 나타나며, 이를 주의할 필요
 1. 기존 근무 방식의 변화와 함께 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
 2.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와 미적용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3.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발생(근로강도와 생산성)

기존 근무 방식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

- 고객들을 대하는데 있어 유연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과 미적용 구성원들간에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간에 다른 해석 발생
 - ☞ 기존에 정해진 시간에 상대하는 고객과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 전통적인 작업방식에서 유연근무제 하의 작업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 ☞ 일시에 출근 또는 퇴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출퇴근이 발생하는 경우
- 제도 실시 이후 직무와 개인생활의 모호한 경계에서 오는 문제 발생
 - ☞ 조기에 퇴근 하는 경우,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조직내 형평성을 제기하는 문제

- 유연근무제 미적용 근로자들의 불공정성 인식
 - ☞ 특정 직원들이 유연한 근무제도나 휴가를 활용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 유연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 및 관리자의 경력관리에 문제발생
 - ☞ 유연근무제 또는 휴가를 잘 쓰는 직원 및 상사의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
- 불공평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과 유연근무제 적용근로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 ☞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이 조기에 승진하거나 유연근무제 대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유연근무제도 활용기회의 편중에 따른 인식
 - ☞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오해하거나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편중되어 실시되는 경우

유연근무제에 대한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 근로자와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구성원들이 유연근무제를 불필요하다고 인식
 - ☞ 유연근무제가 노사상호이익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어 구성원들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 ☞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반대로 높아져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생산성이 하락하는 문제
- 유연근무제 적용을 결정하는 관리자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 ☞ 유연근무제나 휴가 신청에 대해 업무차질을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

Ⅲ. 유연근무와 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5단계

◎ 유연근무제 설계 절차 개요

-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원활히 도입하고 그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단계의 절차를 진행함
 1. 제도시행 이전에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또는 휴가제도 요구를 분석함
 2. 유연근무제와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당사자들이 제도를 지지하는 조직 분위기를 제도도입 이전에 형성함
 3. 근로자와 조직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계함
 4.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한 조직 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실행을 지원함
 5.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장애요인을 측정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함

1. 도입 필요성 분석

1단계. 근로자 요구분석 실시

-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단계

요구분석의 내용

- 근로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어떤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가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파악함
- 바람직한 제도실행을 위한 조직문화와 지원수준에 대해 분석함
-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 도입과 실행의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

2. 조직문화 조성

2단계. 유연근무·휴가제도 도입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 구성원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지하는 조직분위기를 형성하는 단계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 IT기반의 사업환경 변화, CEO의 비전,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요인(직원들의 니즈발생 등)들을 분명히 함
- 유연근무제가 사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화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예, 이직비용 등)을 계산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함

3. 프로그램 설계

3단계.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 프로그램 설계

-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을 설계

설계 시 고려사항

- 유연근무제는 개인과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설계 (제도의 경직성 회피)
- 유연근무제 또는 휴가제도를 실시한 후에도 조직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휴가제도 실행 시 발생할 변화(예, 성과보상, 경력개발 등)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와 협의

4. 프로그램 실행

4단계. 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한 조직 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지원

설계 시 고려사항

- 프로그램 설계를 마무리하고 실행을 주도할 TF팀을 활용, 특정부서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분실시
- 전면적 실행보다는 시범운영 등의 부분적 실행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
- 유연근무제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분리에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보 기술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5. 프로그램 모니터링/개선

5단계. 프로그램 모니터링 후 장애요인은 지속적으로 개선

-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연근무제의 효과와 장애요인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 활동 시 고려사항

- 유연근무제 시행 후, 근로자의 만족도, 생산성, 인력유지율(이직률 또는 퇴직률) 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프로그램 별로 정기적인 개선 프로세스(정기적 설문조사, 성공 및 실패사례 토론회 등)를 마련하여, 지속적 개선 활동 전개

2.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 장애요인 해결과 성공적인 유연근무·휴가제도 운용방안은

-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사간 또는 구성원들간의 갈등이나 생산성저하 등으로 인해 애초에 도입한 유연근무제나 휴가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함
-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의 장애요인은 크게 사용자, 근로자, 조직문화 측면과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로 요약됨
 - ☞ 일반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들은 조직문화 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극복방안을 활용함

1. 사용자 장애요소 해결

◎ 사용자 측면의 장애요인 유형과 해결방안

- 유연근무제 또는 다양한 휴가제도가 CEO의 의지로 도입된 기업일수록 사용자 측면의 장애요인이 적게 나타남
- CEO의 선도입 의지보다는 실무진의 아이디어, 근로자들의 자발적 요청 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사용자 측면의 장애요인(생산성 하락 우려) 발생으로 중단되는 경우들이 나타남
 - ☞ 사용자측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요구됨

2. 근로자 장애요소 해결

◎ 근로자 측면의 장애요인 유형과 해결방안

- 유연근무제나 휴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회의적 태도와 두려움 때문에 해당 제도의 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함
- 특히 유연근무제나 휴가제도를 신청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간에 보이지 않는 형평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인사제도와 연계했을 때 그 갈등이 커지면서 유연근무제 참여율을 떨어뜨리게 됨
 - ☞ 근로자 측면의 장애요인은 대부분 CEO나 경영진의 의지가 강하면 극복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거나 의사소통지원 방법(사내 메신저 등)을 만들어 근로자의 참여의사를 높이도록 함

- ① 유연근무제 설계와 보완 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100%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자료를 찾는 작업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참여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5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5가지는 다 못하더라도 3.5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 “재택근무자가 자발적으로 주당 1~2회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팀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원칙이 형성되어, 현재는 제도화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여러 직군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B사 관리자 인터뷰)
- ② 경영진의 적극적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회의적 태도와 두려움을 해소
 -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 사례를 제공
 - 경영진이 제도 도입의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분명히 선포

3. 조직문화 장애요인과 해결

◎ 조직문화 측면의 장애요인 유형과 해결방안

- 연공서열의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일수록 관리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나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조직문화가 수평적인 외국계 기업이나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도입된 기업일수록 조직문화 장애요인이 약함
 - ☞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CEO, 경영진, 관리자 중심의 개선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성과관리 시스템이나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직문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극복이 가능함.
- ① 관리자의 저항에 대한 해결방안
 -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존재
 - 다양한 성공사례와 장애극복 사례를 포함한 관리자 교육을 제공
 - 제도 도입시 예측되는 변화를 설명하고, 각 변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
 - 프로그램 활용과정에서 관리자의 자율권을 부여
 -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 제공
 -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중심의 성과목표 활용을 장려
 -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것을 분명히 할 필요
 - ② 변화에 대한 문화적인 저항 해결방안
 - 전통적인 근로시간 중심의 작업문화에서 성과중심의 문화로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성과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구성원들의 핵심 신념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요구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조직변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 생산성 장애요소 해결

◎ 생산성 하락 장애요인 유형과 해결방안

- 유연근무제·휴가제도의 활용과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생산성 하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음
- 직무만족도와 이직률 등 근로조건 관련 지표와 생산성 관련 지표(매출액, 영업이익률 등)를 비교분석하고,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조
- 생산성 하락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고, 유연근무제를 점진적으로 시행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
- ✓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

‘24.11.19일(화), M&A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준시가를 다음 방식에 따라 결정 :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30% 내에서 합병가액 할인·할증가능)

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셋째,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공포일(11.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에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금융감독원 -

1. 업무협약 개요

- 금융감독원(전문심의위원 윤정숙)은 '24.12.4.(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근부회장 이기현, 이하 '상장협')와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년부터 내부회계 설계·운영 개념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기존 상장협의 자율규정에서 외감법규로 규정화되어 '24년부터 시행 중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원화된 내부회계 체계로 인한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내부회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장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제공하고 활용하며,
 - 내부회계 관련 질의회신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의회신을 상호 공유하고 검토업무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내부회계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 관련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강사 파견 등에 협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3. 기관별 발언 요지

-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그간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었던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상장협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금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상장협 이기헌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협업함으로써 기업들의 내부회계 관련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과 상장협은 내부회계 평가·보고와 설계·운영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 내부회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

1.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24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중소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기업 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 업체 → 1,000개 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 업체 → 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배분제 폐지), ‘골판지제조공’ 신설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수 확대(1,300개 →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 2017. 6 조사직종 변경(129개 → 118개)
- 2018. 3 조사주기 변경(1년 → 반기; 6월 및 12월 中 발표), 표본수 축소(1,500개 → 1,200개 업체)
- 2019. 3 표본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직종 변경(118개→129개)
- 2019. 8 조사직종 변경(상반기 129개 → 하반기 130개)
- 2020. 3 표본수 확대(1,300개 → 1,400개 업체)
- 2021. 4 조사직종 변경(130개 → 129개)
- 2024. 5 작성주기 변경(연2회 → 연1회), 표본수 확대(1,400개 → 1,500개), 조사직종 재정렬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 준 일 : 2024.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2024.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24. 7. 1. ~ 2024. 8.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2. 표본설계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와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3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중분류별(23개), 매출액 규모별(5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매출액 규모별(5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11. 음료 13. 섬유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 가죽, 가방 및 신발 16. 목재 및 나무제품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24. 제1차 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기타 운송장비 32. 가구 33. 기타 제품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제외
② 매출액 규모	
1규모(80억원 미만), 2규모(80억 이상~120 미만), 3규모(120억 이상~200억 미만), 4규모(200억 이상~500억 미만), 5규모(500억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매출액 규모별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기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 중분류별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업종별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업종별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 표준편차, 변동계수, 목표오차 >

(단위: 개, %)

업 종	기업체수	평균 급여액(백만원)	표준오차	변동계수
10_식료품	2,763	38.7	0.22	0.6%
11_음료	87	44.2	1.55	3.5%
13_섬유제품	1,238	43.7	0.38	0.9%
14_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497	43.7	0.70	1.6%
15_가죽/가방/신발	197	41.5	0.87	2.1%
16_목재/나무제품	436	45.0	0.60	1.3%
17_펄프/종이/종이제품	995	45.1	0.40	0.9%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471	45.9	0.57	1.2%
20_화학물질/화학제품	1,762	47.5	0.36	0.8%
21_의료용물질/의약품	276	43.4	0.85	2.0%
22_고무/플라스틱제품	3,394	45.5	0.22	0.5%
23_비금속광물제품	1,522	47.1	0.33	0.7%
24_제1차금속	1,644	49.6	0.34	0.7%
25_금속가공제품	4,512	45.1	0.19	0.4%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963	44.3	0.33	0.7%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317	45.8	0.41	0.9%
28_전기장비	2,440	44.2	0.30	0.7%
29_기타기계/장비제조	5,554	48.3	0.19	0.4%
30_자동차/트레일러	2,231	43.4	0.25	0.6%
31_기타운송장비	718	43.0	0.48	1.1%
32_가구	594	42.2	0.40	1.0%
33_기타제품	437	42.8	0.67	1.6%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70	56.0	1.37	2.5%

5. 표본규모 및 배분

○ 층 화

- 1차 층화 : 23개 중분류 업종
- 2차 층화 : 5개 매출액 규모

구 분		매출액 규모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제 조 업	14, 15, 17, 24, 28, 32	3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500억
	10, 13, 16, 20, 22, 25, 26, 29, 30, 31	3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1,000억
	11, 18, 21, 23, 27, 33	3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800억
	34	30~80억	80~120억	120~200억	200~500억	500~600억

※ 중소기업의 규모를 매출액 30억 이상만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직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

○ 표본규모 산출공식

- 업종별·매출액 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출함

$$n_{hi} = \frac{(N_{hi} S_{hi})^2}{D^2 + (N_{hi} S_{hi}^2)} \quad \text{단, } D = \frac{\hat{X} E}{Z}$$

여기서 n_{hi} : 업종·매출액규모별 표본수

N_{hi} : 업종·매출액규모별 모집단수

S_{hi} : 업종·매출액규모별 평균 급여액의 표준편차

\hat{X} : 모총계(평균 급여액)

E : 허용오차

$h = 1, \dots, H$: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i = 1, \dots, 5$: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6.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지역별 층화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평균 급여액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

- 설계가중치

$$w_h^1 = \frac{N_h}{n_h}$$

-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dots, H$)
- N_h : h 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 n_h : h 층의 표본 기업체 수

- 평균임금의 추정치

$$\bar{y} = \frac{\sum_{h=1}^H \sum_{i=1}^{n_h} w_{hi} y_{hi}}{\sum_{h=1}^H \sum_{i=1}^{n_h} w_{hi} x_{hi}}$$

여기서, w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다만, $w_{hi}=1$)

y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측정값(임금)

x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직종별 종사자수

* 업종별/기업규모별 통계치가 아닌 직종별 조사노임의 단순평균(평균임금)을 공표하므로 가중치는 1을 적용

- \bar{y} 의 분산추정치

$$var(\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2$$

여기서, $e_{hi} = w_{hi}(y_{hi} - \bar{y} \cdot x_{hi})/w_{..}$, $w_{..} = \sum_{h=1}^H \sum_{i=1}^{n_h} w_{hi}$

- \bar{y} 의 상대표준오차(CV)

$$\widehat{CV}(\bar{y}) = \frac{\sqrt{var(\bar{y})}}{\bar{y}} \times 100$$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업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전체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10_식료품	1,459	20	462	17	391	19	359	14	92	12	2,763	82
11_음료	39	7	12	3	18	5	16	6	2	2	87	23
13_섬유제품	746	12	208	13	168	19	93	12	23	11	1,238	67
14_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제품	231	17	88	8	81	12	72	16	25	7	497	60
15_가죽/가방/신발	106	13	28	9	25	6	23	8	15	5	197	41
16_목재/나무제품	278	11	60	10	55	9	34	8	9	6	436	44

17_펄프/종이/종이제품	593	12	170	11	117	12	86	9	29	5	995	49
18_인쇄/기록매체복제업	318	11	54	9	51	8	44	10	4	2	471	40
20_화학물질/화학제품	845	23	304	20	250	19	265	18	98	18	1,762	98
21_의료용물질/의약품	105	11	57	9	37	6	45	10	32	12	276	48
22_고무/플라스틱제품	1,880	17	590	14	466	16	365	14	93	17	3,394	78
23_비금속광물제품	842	17	313	13	190	11	152	13	25	9	1,522	63
24_제1차금속	733	16	240	15	216	15	303	15	152	11	1,644	72
25_금속가공제품	2,859	19	642	17	500	18	422	17	89	11	4,512	82
26_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54	24	305	23	266	25	308	19	130	12	1,963	103
27_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761	24	211	19	161	22	148	16	36	14	1,317	95
28_전기장비	1,386	26	335	18	313	28	294	14	112	16	2,440	102
29_기타기계/장비제조	3,242	20	874	18	690	19	622	20	126	13	5,554	90
30_자동차/트레일러	970	20	366	15	356	13	421	11	118	10	2,231	69
31_기타운송장비	492	19	92	13	61	20	57	11	16	7	718	70
32_가구	402	9	87	6	59	7	38	8	8	3	594	33
33_기타제품	303	14	66	17	37	14	26	9	5	2	437	56
34_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4	15	18	6	21	7	17	7	0	0	170	35
합 계	19,658	377	5,582	303	4,529	330	4,210	285	1,239	205	35,218	1,500

4. 조사 관련항목 해설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임
 - 유급휴일(주휴) 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 그 외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24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예시1) 1명이 8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수

- 당 400,000원 지급 $\Rightarrow (3,520,000 / 208) \times 8 \approx 135,385$ 원
- 예시2) 1명이 8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Rightarrow (1,950,000 / 150) \times 8 = 104,000$ 원

2. 급여체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본 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div>
조사 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중식비)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직종 통합·삭제 및 명칭변경(2019~)

-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통합 및 삭제,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추가된 신규 직종·분기 직종·명칭변경 직종은 과거자료와 비교시 유의 요망
- 통합 직종(5개)

통합 이전 직종	⇔	통합된 직종명칭
62. 제재원 + 65. 제재기계운전원	→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67. 제지원 +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111. 재봉원 + 114. 재봉기운용사	→	41. 재봉사에 통합
8. 마킹원 + 25. 판금원	→	46. 판금원으로 통합
44. 연선기연합기조작원 + 45. 신선기조작원	→	76. 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 신규 직종(11개)

신규 직종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87. 로봇기술자
40. 패턴사	91. 일반기계수리원
42. 재봉기능원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45. 신발제조기조작원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47. 제관원	107. 상표부착원
84. 머쉬닝센터조작원	

○ 분기(分岐) 직종(4개 → 10개)

당초 직종	분기 직종
134. 식품제조원	5. 제과제빵떡제조원
	6. 식품가공원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40. 일반화학원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59. 배합원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28. 특수차운전원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 명칭변경 직종(31개)

당초 직종명	변경 직종명
13. 귀금속세공원	8. 귀금속보석세공원
65. 제재기계운전원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69. 골판지제조원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60. 가구제조원	15. 가구목제품제조원
41. 요업원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29. 돌분쇄원	19. 채석및석재절단원
127.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48. 고무제품생산원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1. 소성원	27. 소성로조작원
102. 교정사	30. 편집교정사
105. 인쇄기조작원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00. 전산용지정합원	32. 인쇄기능원
109. 방직기조작원	34. 방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110. 방직기계정비원	35. 섬유기계정비원
116. 직포원	36. 직조기조작원
117. 편직원	37. 편직기조작원
113. 염직원	38. 염색기계조작원
112. 직물재단사	39. 재단사
118. 피혁가공원	43. 모피가죽제조원
14. 주물원	49. 주물(주조)원
52. 연마원(기타)	62. 수동연마원(연삭기및 연마기조작원 제외)
37. 선반원	70. 선반기조작원
7. 공작기계조작원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88. 기계정비원	88. 기계장치정비원
139. 보일러조작원	89. 보일러설치정비원
89. 전기정비원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94. 배관원	93. 공업배관원
133. 폐수처리원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99. 제품출하원	124. 제품하역작업원

II. 조사결과

1. 통계 작성결과 요약

- 2024년 6월중 중소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일급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10,684원으로 2023년 8월의 105,773원보다는 4.6%,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5.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주요 직종	`24년 6월(a)	증감률(%)		`23년 하반기(b)	`23년 상반기(c)
		a/b	a/c		
·127 단순노무종사원	90,085	4.7%	4.4%	86,008	86,303
·129 작업반장	135,398	5.7%	7.8%	128,038	125,583
·105 부품조립원	98,387	6.5%	6.8%	92,341	92,152

※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은 18페이지(조사결과)와 30페이지(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를 참조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 종 명	노임단가	직 종 명	노임단가
1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77,173	42. 재봉기능원	83,655
2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61,467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4,961
3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56,472	61. 권취원	87,321
4	128. 안전관리사	145,997	71. 드릴링기조작원	87,630
5	86. 기계기술자	144,082	107. 상표부착원	88,099
6	95. 전기기사	144,066	74. 프레나기조작원	88,810
7	40. 패턴사	141,708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88,949
8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40,830	127. 단순노무종사원	90,085
9	96. 전기산업기사	139,709	110. 목재포장원	90,216
10	1. CAD설계사(기계)	139,578	28. 세척원	90,496

※ '**' 표시는 응답업체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함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 활용분야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5개 수당을 지칭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제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IRQ)의 1.5배($1.5 \times \text{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양극단의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 2024년 6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평균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 특수기호의 정의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 특수기호 표기 사례 >

업 종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2년 8월		2022년 3월	2021년 8월
		조사노임	변동계수	조사노임	조사노임
세척	27. 세척원	92,276	21.5	89,554	85,656
출판· 인쇄	28. 전자조판원	**89,509	10.7	**90,988	**90,628
	29. 편집교정사	129,906	33.8	129,906	*
	30. 종이 및 합성수지 인쇄기계조작원	112,227	9.4	112,137	112,478
	31. 인쇄기능원	110,092	15.6	109,328	108,312
	32. 연포장재접합원	*	*	*	*

○ 그밖에 참고사항

- 변동계수($\widehat{CV}(\bar{y}) = \frac{\sqrt{\widehat{var}(\bar{y})}}{\bar{y}} \times 100$)는 직종별 조사노임의 분산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빈도가 적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변동계수(CV)가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조사노임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

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업 종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4년 6월		2023년 8월	2023년 3월
		조사노임	변동계수	조사노임	조사노임
CAD설계	1. CAD설계사(기계)	139,578	22.7	133,498	131,943
	2. CAD설계사(회로)	133,764	22.9	135,779	135,238
웹활용	3. 컴퓨터웹디자이너	107,958	16.1	**94,342	97,814
컴퓨터운용	4. 컴퓨터운용사	137,484	26.1	117,165	**116,325
식품가공	5. 제과제빵떡제조원	*	*	**80,574	**80,574
	6. 식품가공원	102,694	23.9	91,709	92,209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9,648	18.6	93,426	92,678
귀금속세공	8. 귀금속보석세공원	112,337	22.9	*	*
제재·제지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4,062	20.1	104,109	104,025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	**117,835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15,677	26.4	102,188	100,977

	12. 합판제조원	105,101	18.8	101,054	100,289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1,470	21.0	105,294	105,357
	14. 목제품도장원	*	*	90,586	90,586
가구제조	15. 가구목제품제조원	101,735	17.1	96,503	95,344
유리제품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97,471	16.2	85,647	85,915
	17. 유리절단및재단원	*	*	*	*
요업·화학·콘크리트	18. 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	*	*	**98,993
	19. 채석 및 석재절단원	119,748	24.7	*	*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8,705	14.2	117,543	116,825
화학·고무·플라스틱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3,286	21.7	107,554	107,896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0,044	22.0	108,907	108,321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88,949	13.0	92,020	92,503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2,893	22.1	104,005	104,383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	*	**93,037	**93,540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40,830	7.2	120,033	119,043
	27. 소성로조작원	*	*	*	*

주1 : 조사된 관측값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직종의 관측값의 사분위편차 (IRQ)의 1.5배(1.5*IRQ rule by John Tukey)를 초과하는 이상치(outlier)는 제외함

주2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음,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고 변동계수가 커지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 '**'표시는 5개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시 주의 필요함

주3 : (5~7)식품가공원, (20~21)일반화학원, (23~25)배합원,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부터는 발표하지 않음

주4 : 직종에 대한 해설은 【붙임 2】 제2부 제2장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 참고

업 종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4년 6월		2023년 8월 조사노임	2023년 3월 조사노임
		조사노임	변동 계수		
세척	28.세척원	90,496	9.9	88,931	88,931
출판·인쇄	29.전자조판원	101,831	11.7	95,007	95,001
	30.편집교정사	96,788	17.4	**92,580	**93,024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3,742	26.1	112,112	112,717
	32.인쇄기능원	116,585	19.3	112,054	111,719
	33.연포장재접합원	110,277	27.0	104,533	99,535
방직·의류	34.방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1,372	11.8	91,746	92,922
	35.섬유기계정비원	113,152	14.4	**95,651	**95,651
	36.직조기조작원	97,275	16.1	97,180	94,297
	37.편직기조작원	101,765	23.6	93,956	93,510

2024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38.염색기계조작원	103,883	20.4	87,285	87,285
	39.재단사	99,242	16.5	100,336	101,116
	40.패턴사	141,708	29.1	137,241	137,860
	41.재봉사	100,506	21.2	93,976	95,524
	42.재봉기능원	83,655	7.8	81,539	80,117
모피·피혁	43.모피가죽제조원	**99,297	16.6	103,546	103,727
제화	44.제화원	91,132	11.2	**91,363	**91,363
	45.신발제조기조작원	91,764	22.2	84,844	81,031
금속가공	46.관금원	118,332	16.8	112,147	**119,071
	47.제관원	115,177	21.4	118,269	114,907
	48.단조원	102,335	22.1	97,260	96,561
	49.주물(주조)원	105,444	17.1	96,051	95,664
	50.용접원	111,668	23.8	111,395	111,200
	51.목형원	*	*	*	*
	52.금형원	110,542	20.7	113,294	113,938
	53.다이캐스트원	**92,602	21.6	**79,207	**79,207
	54.조형원	105,282	12.2	**90,743	**90,743
	55.절곡원	109,899	19.9	98,866	98,442
	56.압연원	96,210	9.5	95,870	94,994
	57.열처리원	97,668	11.0	**91,571	**91,515
	58.용해원	100,102	13.8	95,420	95,420
	59.합금원	*	*	**106,260	**106,260
	60.절단원	102,481	17.5	97,350	97,128
	61.권취원	87,321	6.0	*	*
	62.수동연마원	108,034	23.4	97,326	95,390
	63.전선원	**99,248	14.0	**87,861	**87,085
	64.절연원	**98,293	19.9	*	*
도장 · 도금	65.도장원(취부)	104,606	20.9	102,576	102,320
	66.전기도금원	104,443	19.4	89,855	89,855
	67.피복원	*	*	*	*
	68.합성수지피막원	*	*	**93,800	**93,800

교정	69.금속교정원	**107,129	8.7	*	*
공작기계 조작	70.선반기조작원	110,848	24.4	102,216	102,095
	71.드릴링기조작원	87,630	14.1	89,090	90,624
	72.쇠톱기조작원	*	*	**111,861	*
	73.벤딩머신조작원	108,721	18.0	100,831	99,244
	74.프레나기조작원	88,810	10.6	87,120	86,359
	75.레이저광선원	**116,979	9.2	99,235	95,468
	76.선전기조작원	94,670	5.6	**98,951	**97,950
	77.용융도금기조작원	*	*	*	*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0,709	25.7	96,540	96,449
	79.압출기조작원	99,533	16.8	99,258	98,948
	80.인발기조작원	108,281	24.7	**90,306	**90,306
	81.태핑기조작원	96,887	14.2	*	*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102,533	23.0	93,861	93,090
	83.모형조각기조작원	*	*	*	*
	84.머쉬닝센터조작원	116,289	26.4	99,960	99,013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102,315	20.8	99,764	99,382
기계기술	86.기계기술자	144,082	27.5	132,110	134,277
	87.로봇기술자	127,654	24.7	*	*
정비·수리	88.기계장치정비원	125,612	22.9	118,984	118,387
	89.보일러설치정비원	118,637	21.8	108,848	108,848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6,655	25.1	125,582	122,927
	91.일반기계수리원	122,145	19.8	114,694	114,630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4,841	20.3	116,061	116,050
배관	93.공업배관원	**127,781	19.5	**113,919	*
폐수정화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3,026	18.0	113,482	112,526
전기	95.전기기사	144,066	20.4	140,711	139,616
	96.전기산업기사	139,709	20.2	132,867	*
	97.전기기능사	123,474	26.7	116,701	**99,873

* 90.자동차정비원은 2021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2024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업 종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24년 6월		2023년 8월 조사노임	2023년 3월 조사노임
			조사노임	변동 계수		
조립작업		98.전자제품조립원	93,607	16.7	90,949	90,685
		99.전기기계조립원	116,486	21.7	104,168	102,660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4,961	8.2	83,339	83,087
		101.경기계조립원	120,924	20.3	103,905	101,502
		102.중기계조립원	128,206	27.4	113,367	110,067
		103.통신기계조립원	107,591	27.2	91,269	89,995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80,974	**80,974
		105.부품조립원	98,387	20.4	92,341	92,152
제품검사· 마감		106.제품검사및조정원	101,741	21.2	96,552	96,692
		107.상표부착원	88,099	12.9	86,445	86,484
포장		108.기계물품포장원	96,815	18.5	92,049	91,978
		109.수동물품포장원	92,609	16.0	86,768	86,720
		110.목재포장원	90,216	10.0	**100,107	**103,346
		111.철강포장원	**103,126	20.3	*	*
품질 관리	화학 공학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161,467	20.9	142,790	**152,242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121,433	19.7	117,329	117,277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138,062	22.9	122,624	122,225
	금속 재료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156,472	21.7	132,057	**141,157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8,433	15.8	119,655	116,912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6,726	23.0	**97,260	*
	전기· 전자· 기계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77,173	33.6	150,218	**148,938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5,933	27.4	123,696	120,888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00,919	26.3	104,447	99,668
	기타 공학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136,360	**136,968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9,633	20.8	116,723	116,637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115,798	24.7	106,865	105,653
하역·적재· 이송		124.제품하역적재원	100,402	19.4	98,887	99,130
		125.내부특수차운전원	108,401	21.2	101,290	100,879
		126.외부특수차운전원	112,086	19.5	106,992	106,889
단순노무		127.단순노무종사원	90,085	12.6	86,008	86,303
안 전		128.안전관리사	145,997	21.8	134,355	133,698
작업반장		129.작업반장	135,398	27.9	128,038	125,583
전체평균			110,684	-	105,773	104,708

5. 이전 직종코드·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

기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8)	새로운 직종코드 및 직종명(2019~)
1. CAD설계사(기계)	1. CAD설계사(기계)
2. CAD설계사(회로)	2. CAD설계사(회로)
6. 드릴링기조작원	71. 드릴링기조작원
7. 공작기계조작원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8. 마킹원	삭제(46.판금원으로 통합)
12. 절곡원	55. 절곡원
13. 귀금속세공원	8. 귀금속보석세공원
14. 주물원	49. 주물(주조)원
15. 단조원	48. 단조원
16. 금형원	52. 금형원
17. 목형원	51. 목형원
18. 조형원	54. 조형원
19. 압연원	56. 압연원
20. 압출기조작원	79. 압출기조작원
21. 열처리원	57. 열처리원
22. 용해원	58. 용해원
23. 인발기조작원	80. 인발기조작원
24. 태핑기조작원	81. 태핑기조작원
25. 판금원	46. 판금원
26. 합금원	59. 합금원
28. 다이캐스트원	53. 다이캐스트원
30. 쇠톱기조작원	72. 쇠톱기조작원
31. 모형조각기원	83. 모형조각기조작원
32. 절단원	60. 절단원
34. 유리절단및재단원	17. 유리절단및재단원
35. 밴딩머신조작원	73. 밴딩머신조작원
36. 금속교정원	69. 금속교정원
37. 선반원	70. 선반기조작원
38. 프레나기조작원	74. 프레나기조작원
39. 레이저광선원	75. 레이저광선원
40. 일반화학원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고무,플라스틱제외)
40. 일반화학원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41. 요업원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42. 합성수지피막원	68. 합성수지피막원
43. 권취원	61. 권취원
44. 연선기.연합기조작원	삭제(76.신선기조작원으로 통합)
45. 신선기조작원	76. 신선기조작원

46. 절연원	64. 절연원
47. 피복원	67. 피복원
48. 고무제품생산원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50. 용접원	50. 용접원
5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82.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52. 연마원(기타)	62. 수동연마원(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제외)
53. 세척원	28. 세척원
54. 목제품도장원	14. 목제품도장원
55. 도장원(취부)	65. 도장원(취부)
56. 용융도금기조작원	77. 용융도금기조작원
57. 전기도금원	66. 전기도금원
5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7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59. 배합원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59. 배합원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59. 배합원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60. 가구제조원	15. 가구목제품제조원
62. 제재원	삭제(9.목재가공기계조작원에 통합)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64. 합판제조원	12. 합판제조원
65. 제재기계운전원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66. 목재건조기계조작원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67. 제지원	삭제(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에 통합)
69. 골판지제조원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70. 부품조립원	105. 부품조립원
71. 전기기계조립원	99. 전기기계조립원
72. 중기계조립원	102. 중기계조립원
73. 경기계조립원	101. 경기계조립원
74. 전자제품조립원	98. 전자제품조립원
75. 통신기계조립원	103. 통신기계조립원
76.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7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78.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79.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80.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81.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82.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19. 전기, 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83.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84.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8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86.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87.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88. 기계정비원	88. 기계장치정비원
89. 전기정비원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90. 차량정비원	삭제(90. 자동차정비원)
91. 제품검사및조정원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92. 기계기술자	86. 기계기술자
93. 전선원	63. 전선원
94. 배관원	93. 공업배관원
95. 목재포장원	110. 목재포장원
96. 기계물품포장원	108. 기계물품포장원
97. 수동물품포장원	109. 수동물품포장원
98. 철강포장원	111. 철강포장원
99. 제품출하원	124. 제품하역적재원
100. 전산용지정합원	32. 인쇄기능원
101. 전자조판원	29. 전자조판원
102. 교정사	30. 편집교정사
103. 컴퓨터웹디자이너	3. 컴퓨터웹디자이너
105. 인쇄기조작원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08. 연포장재접합원	33. 연포장재접합원
109. 방직기조작원	34. 방직기계조작원(섬유기계조작원)
110. 방직기계정비원	35. 섬유기계정비원
111. 재봉원	41. 재봉사
112. 직물재단사	39. 재단사
113. 염직원	38. 염색기계조작원
114. 재봉기운용사	41. 재봉사
115. 제화원	44. 제화원
116. 직포원	36. 직조기조작원
117. 편직원	37. 편직기조작원
118. 피혁가공원	43. 모피가죽제조원

120. 전기기사	95. 전기기사
121. 전기산업기사	96. 전기산업기사
122. 전기기능사	97. 전기기능사
126. 컴퓨터운용사	4. 컴퓨터운용사
127.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28. 특수차운전원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28. 특수차운전원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29. 돌분쇄원	19. 채석및석재절단원
131. 소성원	27. 소성로조작원
133. 폐수처리원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4. 식품제조원	5. 제과제빵떡제조원
134. 식품제조원	6. 식품가공원
134. 식품제조원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35. 단순노무종사원	127. 단순노무종사원
136. 작업반장	129. 작업반장
137. 안전관리사	128. 안전관리사
138. 벨트콘베이어작업원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139. 보일러조작원	89. 보일러설치정비원
신규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신규	40. 패턴사
신규	42. 재봉기능원
신규	45. 신발제조기조작원
신규	47. 제관원
신규	84. 머쉬닝센터조작원
신규	87. 로봇기술자
신규	91. 일반기계수리원
신규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신규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신규	107. 상표부착원

Ⅲ. 용어해설

☐ 조사임금

-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조사기준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산정함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름에 유의

☐ 직종코드 및 직종명

-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 분류로 129개의 직종코드가 있음
- 직종명은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어온 직종명칭과 함께 공적인 업종분류 및 직업분류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음

☐ 총인원

- 조사기준월 근로에 대하여 실제 임금이 지급된 해당 직종의 모든 생산직 상시근로자 (남녀)를 의미하며, 2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 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간 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월 정상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조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 제외
-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정상근로시간은 208시간(또는 209시간)으로 조사함
- 근로자중 만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월 정상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차감함
-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주당 8시간(1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줌

☐ 기본급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의 합계를 조사함

☐ 통상적 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해당직종 총인원의 월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의 합계를 조사함
(※ 만일 ‘월 정상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

- 위험수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참고】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해설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된다.

☐ 기본급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시간급 등을 기본급에 기입

*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기본연봉/12)하여 기본급에 기입

☐ 통상적 수당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본 보고서에서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지칭

☐ 기타 수당(조사대상 아님)

-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 수당 포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

☐ 총지급액

-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조사(주휴수당 포함)

☐ 평균일급

-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 일급으로 월 지급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함(日 8시간 근무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고려되지 않음)

Ⅳ. 유의사항☐ 직종분류의 근거 및 시계열 단절

-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종분류는 기존의 중소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고유 직종과 함께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한국고용 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유사한 업무의 직종은 같은 직업군으로 편제하고 새로 발생한 유의미한 직업군은 신규직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활용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삭제하는 등 현재의 산업 및 직업체계와 연계되고 직관적인 직종분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적용한 것임
- 2018년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 구분기준이 기존의 종사자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년도 직종별조사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통계작성체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의 기획, 표본설계, 직종체계 개편 및 조사표 확정, 결과분석 및 발표
↑↓	
실사용업체	조사실사진행, 조사표 회수, 조사표 입력(입력확인)
↑↓	
중소기업	조사표 기재(인터넷시스템 직접입력 병행)

☐ 조사대상 및 조사임금

- 조사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

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단, ‘월 정상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 수당’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조사

□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문의사항

○ 직 종 명

- 업체 입력 직종명이 기준 직종명(조사표 직종코드 및 직종명)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급적 가장 연관되는 기준 직종명으로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명은 신규 직종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함

○ 상시근로자수

- ‘총인원’은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중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 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대표자(임원) 등을 제외한 인원임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가장 업무비중이 큰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며, 만일 업무비중이 균등한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 간수와 급여도 나누어 각각 조사하고 해당 직종별 총인원 수에 각각 포함시킴

○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 연봉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산정하므로 임금산정 기준이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기본급에 모두 합산되어 있으므로 조사표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수당 등 유무를 확인하고, 수당 등이 있을 경 우에는 구분하여 조사함

○ 총월정상근로시간

- 조사과정에서 직종별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지 않고 1인당 월정상근로 시간을 적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총인원의 월정상근로시간의 총합을 구해 조사함

○ 월정상근로시간의 산정

- 월 정상근로시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상 1일 8시간, 주5일 만근하여 근무한 경우 조사기준월의 정상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8시간(또는 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간으로는 약 66시간 이상임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일(금)	11월 4일(월)	11월 5일(화)	11월 6일(수)	11월 7일(목)
미 달 러 (USD)	1,379.30	1,377.90	1,371.30	1,377.80	1,391.50
위 안 화 (CNH)	193.44	193.36	193.06	193.95	194.35
일 본 엔 (JPY)	908.24	904.19	901.31	907.76	901.29
유 로 화 (EUR)	1,501.44	1,498.95	1,491.77	1,505.11	1,493.43
영 국 파 운 드 (GBP)	1,779.50	1,785.76	1,777.07	1,795.41	1,792.18
캐 나 다 달 러 (CAD)	990.13	989.69	986.55	995.99	998.10
홍 콩 달 러 (HKD)	177.42	177.19	176.43	177.27	178.94

통 화 명	11월 8일(금)	11월 11일(월)	11월 12일(화)	11월 13일(수)	11월 14일(목)
미 달 러 (USD)	1,399.10	1,385.40	1,395.30	1,401.10	1,407.30
위 안 화 (CNH)	194.32	193.45	193.98	193.37	194.42
일 본 엔 (JPY)	914.21	906.17	907.60	906.60	905.60
유 로 화 (EUR)	1,510.89	1,483.97	1,486.90	1,487.90	1,486.53
영 국 파 운 드 (GBP)	1,816.59	1,789.17	1,795.33	1,785.42	1,788.47
캐 나 다 달 러 (CAD)	1,009.05	996.01	1,002.05	1,004.37	1,005.61
홍 콩 달 러 (HKD)	180.04	178.17	179.44	180.13	180.86

통 화 명	11월 15일(금)	11월 18일(월)	11월 19일(화)	11월 20일(수)	11월 21일(목)
미 달 러 (USD)	1,406.40	1,402.80	1,392.60	1,392.00	1,391.60
위 안 화 (CNH)	193.91	193.47	192.35	192.41	192.28
일 본 엔 (JPY)	899.61	906.93	901.39	900.56	895.87
유 로 화 (EUR)	1,481.08	1,477.99	1,475.39	1,475.10	1,467.37
영 국 파 운 드 (GBP)	1,781.21	1,770.26	1,764.91	1,765.40	1,760.51
캐 나 다 달 러 (CAD)	1,000.04	995.99	993.19	997.49	995.89
홍 콩 달 러 (HKD)	180.74	180.15	178.91	178.84	178.80

통 화 명	11월 22일(금)	11월 25일(월)	11월 26일(화)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미 달 러 (USD)	1,398.10	1,400.50	1,398.20	1,401.20	1,396.80	1,394.70
위 안 화 (CNH)	192.85	192.98	192.77	193.16	192.36	192.42
일 본 엔 (JPY)	906.00	907.62	908.13	915.01	925.31	920.87
유 로 화 (EUR)	1,464.51	1,467.23	1,467.83	1,469.93	1,476.21	1,472.04
영 국 파 운 드 (GBP)	1,759.86	1,762.60	1,757.61	1,761.66	1,771.28	1,769.60
캐 나 다 달 러 (CAD)	1,000.39	1,004.55	999.79	997.12	995.94	995.22
홍 콩 달 러 (HKD)	179.63	179.93	179.66	180.04	179.51	179.19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증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증개 홈페이지(<http://www.smbi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